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협동연구 시리즈 04-03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소득격차 완화방안

연구보고 R490-3 / 2004. 12.

산업활동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농촌지역 산업활성화

산업연구원 김 정 홍 연구 위원

주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産 業 研 究 院

머 리 말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뿐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산업발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이 더욱 중요한 정책테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간 균형발전과 함께,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값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이 전통적인 농업에만 의존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농촌청년층의 부재, 동남아나 남미에 비해 높은 인건비 및 대량 농작물 생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체 수요충족을 뛰어넘어 농업부문만으로 대외경쟁력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살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업과 제조업, 농업과 서비스업의 접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농촌지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산물을 이용한 산업화, 농촌기업과 도시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학과 연구소의 농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간 산업발전 격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에 있는 산업의 특성을 찾아내어, 문제점

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농 간 산업불균형의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산업발전, 나아가 지역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2004년도 경제사회연구회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3개 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중 도시와 농촌 간의 산업격차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된 제1차 연도 연구 과제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협동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물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집필한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의 김정홍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도농 간 산업격차 완화 및 농촌산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2004. 12.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요 약

이 연구에서는 통계분석과 실태 조사에 의한 도농 간 산업격차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내지는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를 도출한 다음, 도농 간 산업발전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도농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격차를 중심으로 통계자료분석을 통해 각 지역을 업종별, 지역별로 유형화한 다음,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지역이란 기초지자체의 시와 광역지자체의 구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은 기초지자체의 군과 광역지자체의 군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통계는 통계청 광공업통계 중분류에 의하였으며, 산업분석대상 기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로 하였다. 도농 간 불균형 정도는 생산, 고용, 사업체 수 등 기초통계를 이용해 비중 및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2002년 당시 전국 제조업대비 도시지역 제조업의 비중을 보면, 사업체 수 등 주요 생산 관련 지표면에서 87~88%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만 80%를 하회하고 있다. 1995년에는 제조업 주요 지표면에서 도시의 비중은 약 80% 내외였으므로,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그 후 7년 동안 도시의 비중이 약 8%포인트 정도 높아진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인구나 면적 변화율인 4%포인트 내외의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주요 제조업지표의 변화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95-2002년 사이에 전

국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모두 2% 이내의 낮은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군 지역은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각각 1.6%, 2.5% 감소한 반면, 시 지역은 2% 이상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군 지역 내에서도 7대 도시의 서비스업은 9%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0% 이상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에서는 경기도가 7~8% 증가하여 군 지역 감소분을 도시지역에서 만회하였으며, 경남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제3장에서는 발전된 지역과 낙후지역 중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입지 여건, 산업발전 정도, 지자체의 지원정책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양 지역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 지역은 제조업 측면에서 발전된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남 함안군과, 제조업 생산이 빈약한 충북 영동군을 대상으로 2차 자료와 면접조사에 의한 실태분석을 하였다.

경남 함안군은 도내 10개 군 중 인구비중이 50%이고, 생산액 비중은 도내 54.9%에 달하며, 경남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그러나 충북 영동군은 도내 9개 군 중 인구비중은 16.2%나 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2%에도 못 미치고, 상당 부분 전통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다.

분석 결과, 양 지역은 부존자원의 분포, 지자체의 정책 추진, 산업용지 가격 등보다도, 지역 내에 확고한 전략산업이 존재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함안군의 기계·장비산업은 도시특화형 산업인데 반해, 영동군의 음식료품은 농촌특화형 산업이었다. 또한 경남의 전략산업인 기계산업이 창원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함에 따라, 함안군은 확실한 주력 산업으로 기계부품업체들이 상당수 입지해 있다. 이에 반해 영동군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IT, BT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매우 적고, 상당수의 업체가 고용규모나 생산액이 적은 중

소기업 중심의 음식료품 등 농산물 가공업체이다. 영동군은 포도를 중심으로 포도주, 포도즙, 포도잼 등 가공산업이 활발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지역경제 견인에는 역부족이었다.

제4장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농간 산업발전 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과거의 산업입지정책 및 농공단지 조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을 리뷰하였다. 그다음 이러한 지역 간 산업격차 완화를 위한 최근의 정책흐름을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1960년대에는 대도시 주변의 공단개발, 1970년대는 울산 등에 대규모 거점 공단개발,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지방 분산, 1990년대에는 권역별 특성화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산업입지정책에 의해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낙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년 동안 300개 정도가 조성되었으나, 1개 농공단지당 약 1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입주하였고, 단지당 평균 고용규모도 350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센터설립,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전이 뒤진 기초지자체 혹은 농촌지역의 지연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연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자금지원, 기술이전,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는 광역지자체별로 10개 이내의 지연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낙후지역 지원이 체계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농촌을 중심으로 한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추진하는 지연산업과 신활력지역에 대한 지원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신활력지역 내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농촌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의 자원, 특산물을 산업화하는 지연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기업뿐 아니라, 인력, 전후방 연관산업, 연구소 및 지원기관 등이 두루 부족한 농촌 특성상, 단기간에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육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 중심의 지연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산업화를 통해 지연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선정된 지연산업은 식품 관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관광, 문화, 농림어업 및 섬유산업 등의 비중도 높다.

한편 농촌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에서도 농업과 제조업의 공존 내지 상생을 희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농업 부문으로는 식품가공 등 중소기업 제조업체 유치가 전체의 2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농산물가공 등 영세가공업체의 창업으로 20.8%를 차지하였다.

제6장 제1절에서는 농촌지역 산업낙후의 원인을 여러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첫째, 신고전파이론, 누적적 인과관계론 및 불완전확산이론 등 여러 모델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지식과급 부족이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둘째,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지식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은 도시에 집중한 반면, 농촌은 음식료품산업이나 부존자원활용산업 등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입지함에 따라 산업격차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양 지역 간 여러 입지 여건 및 산업분포 차이 등을 비교하여 낙후발생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넷째, 산업입지정책에 의한 도농 간 산업격차 발생원인을 찾아보고, 다섯째, 농촌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농촌 낙후의 원인과 향후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제6장 제2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농촌지역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여기서의 초점은 앞으로 농촌지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조업, 특히 지연산업 육성 등 복합산업화를 통해 농외소득을 증대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및 RIS구축, 농산물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농공단지의 활성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gional Comparison of Industrial Activities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in Rural Area

Throughou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isparities between regional industries have deepened and widened. Therefore, the achieveme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theme. To attain policy goal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industries should be eliminated.

In Chapter 1 of this study, the gap of industrial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survey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located in each region are analyzed. Then existing problems are described, and the direction for rural development is suggested. Hopefull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reduc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al industries.

Chapter 2 analyzes the statu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classifies regions by development degree and industry, and then suggests policy tools. In this study, the KSIC 2-digit code of manufacturing data from the years 1995 to 2002 was used. The severe dispar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between rural areas were analyzed. For example, the percentage of urban manufacturing industries was 80% in 1995, but in 2002 the figure rose to 87~88%.

In Chapter 3, an interview-based survey was conducted for residents in Haman-gun, Gyeongsangnam-do as a representative of developed area and Yungdong-gun, Chungcheongbuk-do as a representative of underdeveloped area. During the survey, the focus was put on comparing location, industrial development, supporting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problems between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reg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regional development is to foster strategic industries within the region. For example, Haman-gun has many machinery-related firms, which constitute a strategic industry of Gyeongsangnam-do, but Yungdong-gun doesn't have such strategic industries. However, differential factors between the two regions, such as distribution of resources, policy measures of local governments and prices of industrial sites, are not that significantly different.

In Chapter 4, the trend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and rural industrial park policies are reviewed. Next, recent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re studied.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strategic industries mainly in urban areas, and developed regions have heavy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due to many policy measures. But the government has been less supportive of rural industries to date and underdeveloped regions have only light and traditional industries. In the future,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be more interested in fostering rural industries.

In Chapter 5, the fostering of rural industries through the us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resources and the raising of their competitiveness are stressed. It is very difficult to foster advanced industries in rural areas within a short time, because rural areas doesn't hav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S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identify and foster competent industries in such area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rural residents want to have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ogether in their region.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6 describes the causes of underdevelopment of rural industries. The discovered causes are as follows: i)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s, it seems that the dispar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ve deepened because knowledge spillover from urban to rural areas haven't properly occurred; ii) The differences in industrial structures have caused the dispar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refore, the rural areas have to restructure their industries to enable them to produce high added values; iii) Comparing the case study regions, it is found that

location conditions and industrial structure connections to near-urban industries are important factors in pro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iv) The interview of the rural resid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causes of underdevelopment of rural areas and how to resolve them.

In the second section of Chapter 6, the measures to resolve the causes of underdevelopment are proposed. This section puts a focus on the fact that the agricultural industry has its limit in developing rural areas in the future, so that by fostering other local industries based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sources, local governments have to increase rural incomes. Moreover, to develop rural industri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lusters and RIS'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entered on rural industries, such as high value-added agricultural processing industr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parks in rural areas.

Researchers: Jeong-Hong Kim.
E-mail address: Kimjh@kiet.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2

제2장 도농 간 산업분포의 현황 및 유형화에 의한 정책대응

1. 지역 간 성장 격차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모델 5
2. 도농 간 면적 및 인구분포의 차이 12
3. 도농 간 산업분포의 불균형 15
4. 농농 간 산업분포의 불균형 22
5. 업종별 · 지역별 유형화에 의한 정책적 대응 24

제3장 농촌 사례 지역의 산업발전 실태비교

1. 산업발전지역의 사례: 경남 함안군 35
2. 산업낙후지역의 사례: 충북 영동군 53

제4장 지역산업 분산을 통한 도농 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1. 산업입지정책의 추진 70
2. 농공단지 조성정책의 추진 80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84
4.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추진 91

제5장 지연산업의 현황 및 사례

| | |
|--------------------------------|-----|
| 1. 지연산업의 개념 및 특성 | 93 |
| 2. 지역별 지연산업 선정 현황과 육성방향 | 97 |
| 3. 충북 영동군의 자원활용형 지연산업 사례 | 107 |

제6장 결 론

| | |
|---------------------------|-----|
| 1. 농촌지역 산업낙후의 원인 | 113 |
| 2. 농촌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제언 | 124 |

| | |
|-------------|-----|
| 참고 문헌 | 143 |
|-------------|-----|

표 차 례

제2장

| | |
|---|----|
| 표 2- 1. 광역지자체별 농촌의 면적 및 인구비중 | 12 |
| 표 2- 2. 지역별 도농 간 인구밀도 비교 | 14 |
| 표 2- 3. 지역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2002 | 16 |
| 표 2- 4. 지역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1995 | 17 |
| 표 2- 5. 업종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2002 | 18 |
| 표 2- 6. 업종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변화, 1995-02 | 19 |
| 표 2- 7. 도농 간 서비스업의 비중 및 증가율 변화 추이, 1995-02 | 21 |
| 표 2- 8. 경기도의 농촌지역 간 제조업 비중 차이, 2002 | 22 |
| 표 2- 9. 충청도의 농촌지역 간 제조업 비중 차이, 2002 | 23 |
| 표 2-10. 경남도의 농촌지역 간 제조업 비중 차이, 2002 | 24 |
| 표 2-11.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제조업 특화도 분석 | 27 |
| 표 2-12. 주요 제조업의 도농 간 특화유형 분류 | 28 |
| 표 2-13. 도농지역의 그룹화, 유형화의 기준 | 29 |
| 표 2-14.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에 의한 유형 구분(1) | 30 |
| 표 2-15.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에 의한 유형 구분(2) | 31 |

제3장

| | |
|-------------------------------|----|
| 표 3- 1. 함안군의 산업별 사업체 형태 | 37 |
|-------------------------------|----|

| | | |
|---------|----------------------------|----|
| 표 3- 2. | 함안군의 종사자 규모별, 읍면별 사업체 수 분포 | 38 |
| 표 3- 3. | 함안군의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분포 | 39 |
| 표 3- 4. | 함안군내 주요 제조업종의 지역별 분포 | 40 |
| 표 3- 5. | 함안군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2004 | 41 |
| 표 3- 6. | 함안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현황 | 42 |
| 표 3- 7. | 함안군의 지역별 시장의 분포 | 43 |
| 표 3- 8. | 함안군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45 |
| 표 3- 9. | 함안군의 연도별 후계농업인 선정현황 | 47 |
| 표 3-10. | 함안군 수출농단의 현황 | 49 |
| 표 3-11. | 함안군 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안 | 50 |
| 표 3-12. | 함안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현황 | 51 |
| 표 3-13. | 영동군의 산업별 사업체 형태 | 55 |
| 표 3-14. | 영동군의 종사자 규모별, 읍면별 사업체 수 분포 | 55 |
| 표 3-15. | 영동군의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분포 | 56 |
| 표 3-16. | 영동군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2004 | 57 |
| 표 3-17. | 영동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 | 59 |
| 표 3-18. | 영동군의 지역별 시장의 분포 | 60 |
| 표 3-19. | 영동군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현황 | 62 |
| 표 3-20. | 영동군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 63 |
| 표 3-21. | 영동군의 농촌특산단지 현황 | 64 |
| 표 3-22. | 영동대 (주)벤처식품 수혜 현황 | 66 |
| 표 3-23. | 늘머니과일랜드의 주요 시설물 | 67 |
| 표 3-24. | 영동군의 고용촉진훈련 현황 | 68 |

제4장

표 4- 1. 지역별 농공단지의 분포 현황 82
 표 4- 2.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선정 현황 92

제5장

표 5- 1. 지연산업의 SWOT 분석 95
 표 5- 2. 지연산업의 분류 96
 표 5- 3. 일라이트의 활용 분야 및 효과 108

제6장

표 6- 1. 도농 간 산업격차가 확대되는 이유 123
 표 6- 2.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 123
 표 6- 3. 농촌지역에서 개발이 바람직한 비농업 부문 124
 표 6- 4. 지역산업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125

부 표

부표 1. 시 지역 인구변화 138
 부표 2. 군 지역 인구변화 138
 부표 3. 시 지역 면적변화 139
 부표 4. 군 지역 면적변화 139
 부표 5. 시 지역 인구밀도 변화 140
 부표 6. 군 지역 인구밀도 변화 140
 부표 7. 시 지역 제조업 현황, 2002 141
 부표 8. 군 지역 제조업 현황, 2002 142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 1. 도농지역의 그룹화, 유형화 29
- 그림 2- 2. 유형별 인구 증가율과 생산 증가율의 예시도 33

제6장

- 그림 6- 1. 1인당 GRDP와 지역노동생산성의 표준편차계수 추이
..... 116
- 그림 6- 2. 상위 지자체의 1인당 GRDP 및 노동생산성 비중 추이
..... 116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뿐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산업발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16개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 완화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도농 간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촌이 전통적인 농업에만 의존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농촌청년층의 부재, 동남아나 남미에 비해 높은 인건비 및 대량 농작물 생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체 수요충족을 뛰어넘어 농업부문만으로 대외경쟁력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살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업과 제조업, 농업과 서비스업의 접목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농촌지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산물을 이용한 산업화, 유희인력의 산업 부문 활용, 농촌기업과 도시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학과 연구소의 농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간 산업발전 격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에 있는 산업의 특성을 찾아내어,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농 간 산업불균형의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산업발전, 나아가 지역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도농 간 산업격차를 완화하고, 농촌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의 자원, 특산물을 산업화하는 지연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업뿐 아니라, 인력, 전후방 연관산업, 연구소 및 지원기관 등이 두루 부족한 농촌 특성상, 단기간에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육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통계에 의한 도농 간 산업격차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내지는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를 도출한 다음, 도농 간 산업발전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산업통계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다음, 생산, 고용, 사업체 수 등 기초통계를 이용해 도농 간 불균등 정도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산업, 특히 농업과 제조업이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여 현지를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입지 여건, 산업발전 정도, 산업지원정책 등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양 지역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공업입지정책, 농공단지 육성정책,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나타난 지역산업육성정책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모델, 산업 및 업종분포, 사례 지역비교, 정책검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도농 간 산업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이러한 도농 간 산업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된 통계는 통계청 광공업통계 중분류에 의하였으며, 산업분석대상 기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로 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행정구역의 변화와 산업분류의 변화에 따른 통계왜곡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즉, 지역산업과 사회 변화의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은 지나치게 길지도, 지나치게 짧지도 않은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대표변수, 예컨대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등을 중심으로 발전추세에 있는가, 침체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과거 제조업 발전이 뒤졌던 지역의 성장률이 높게 측정되어 최근의 변화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5년 미만의 단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면 인구와 같이 장기추세 파악이 필요한, 변화가 느린 변수의 추세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사회학적 개념인 도농, 즉 도시와 농촌의 엄밀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와 기초지자체의 시는 도시로 분류하고, 광역시라도 군으로 되어 있거나 기초지자체의 군은 농촌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을 시·군·구 단위로 접근하는 이유는 만약 읍·면·동 등 세분된 행정구역에 의해 접근할 경우, 통계청에서 기업정보 보호차원에서 3개 이상의 기업이 입지한 경우만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통계상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농 통합을 실시한 지역인 경우, 1995년과 2002년 당시 군이었는데 구였는가를 기준으로 농촌과 도시로 구분하였다. 즉, 1995년 군이었다가 2002년에 시 혹은 구로 승격된 경우(예: 경기도 안성군 → 안성시), 1995년에는 농촌에, 2002년에는 도시지역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제 2 장

도농 간 산업분포의 현황 및 유형화에 의한 정책대응

1. 지역 간 성장 격차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모델

지역 간 성장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견해가 다른데, Caniëls는 이를 신고전파 모델, 누적적 인과 관계 모델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1. 신고전파(neoclassical) 모델

1960년 이래 많은 지역경제학자들은 신고전파 성장론을 지역성장모델에 적용하고 있는데, 보츠(Borts)의 모델이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Caniëls 1996, 3). 신고전파 모델에서는 저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본의 배분이나 자본-노동비율의 변화가 경제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반면, 동 모델에서 기술은 도처에서 무상으로 얻을 수 있고, 완전정보의 가정에

따라 기술이 즉시 확산되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에 따라 신고전파 모델에서는 지식을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지식은 즉시 확산되기 때문에, 동 모델에 의할 경우 지역 간 기술격차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기술 변화에 의한 성장 격차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가정은 기술혁신을 이룬 지역과 그 밖의 지역 간에 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지식의 확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고전파의 견해처럼 모든 지식이 즉시 확산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한 암묵지식(tacit knowledge)의 영향이 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암묵지식이란 오랜 시간을 두고 습득한 특정 기술과 같이 주로 사람에 체화(embedded)된 지식을 말한다. 암묵지식의 특성은 전달하거나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서서히 나타날 뿐 아니라, 주로 학습에 의해 서서히 확산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간 성장 격차와 관련하여 신고전파에서는 성장의 지역 간 수렴현상(convergence)을 예상하고 있다. 즉, 이 모델에서는 일시 지역 간 성장 격차가 존재한다 해도, 생산요소가 즉시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 간 자본축적의 차이, 나아가 지역 간 성장 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모든 지역의 생산함수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자본축적에 차이가 존재한다 해도, 즉시 노동은 저임금지역에서 고임금지역으로, 자본은 고금리지역에서 저금리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런 움직임은 성장률 격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동 모델에 입각할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산업발전 격차는 지식이나 그 밖의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에 의해 장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1.2. 누적적 인과관계(cumulative causation) 모델

Kaldo는 신고전파가 자원 배분의 중요성이나 혹은 지역 간 자원부존의 차이가 지역성장률 차이를 가져온다는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원부존의 차이만으로는 왜 어떤 산업이 특정 지역에 입지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입지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칼도의 주장에 의하면 신고전파의 주장이 기후, 지리적 요인 등 “토지에 기반을 둔(land-based)” 경제활동인 경우는 옳을 수 있으나, 그 밖의 산업활동 전반의 경우 지역발전의 차이를 자원부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제조업을 위한 자원은 성장과 내생적인 관계에 있으며, 토지에 기반을 둔 활동을 위한 자원은 외생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는 지역 간 성장의 특성이나 차이로부터 자원부존이나 자본축적의 차이가 도출될 수도 있고, 자원부존이나 자본축적의 차이가 성장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 효과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의 결과로 도출될 수도 있고,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호순환에 의해 누적적 성장(cumulative causation)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 내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 중의 일부는 R&D투자에 사용될 것이므로, 증가된 R&D투자의

이익은 그 지역에서 실현되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다시 그 지역의 산출증가를 가져와 성장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즉, 지식의 파급이 순간적으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지식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 간 기술격차도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런 경우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 현상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누적적, 순환적 인과관계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칼도는 신고전파 모델의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가정과 지식의 완전 이동성 가정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과 지식의 이동불능 가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느 지역에서 기술혁신에 의해 지식이 축적되면, 그 지식은 이동이나 확산 없이 그 지역 내부에 체화된다고 본다. 이런 주장에 의할 경우, 특정 지역의 새로운 기술지식은 그 지역의 첨단산업제품 생산에 있어 투입물이 된다. 그러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R&D 활동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첨단산업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특화할 수 있고, 이것은 그 지역 성장의 속도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3. 불완전 확산(imperfection diffusion) 모델

카니엘스(Caniëls)는 기술지식의 즉시확산을 가정하는 신고전파 모델과 이동·확산 불능을 가정하는 누적적 인과 관계 모델의 중간에 불완전확산모델을 도입하였다. 그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간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식의 확산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지식의 공간적 확산은 지역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주로 경제지리학자들

이 관심을 두어 왔다고 한다. 특히 지베르트(Siebert)는 기술이 완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느리게 확산된다고 보고, 신고전파 성장모델에 기술창출, 응용 및 확산을 도입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지식확산의 중심 아이디어는 발명이 공간을 통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나, 발명의 확산은 특정한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확산 경로를 구분하였다(Caniëls 1996, 11).

첫째, 다웬트(Darwent) 등이 주장한 일반적인 공간확산모델(*general spatial diffusion model*)로, 혁신을 수반하는 경제성장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중심지의 배후지역 내지는 더 적은 중소도시로 확산된다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이 이루어지면 한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그 혁신이 확산된다고 본다. 이러한 발명의 중심지를 둘러싼 지역에서 혁신이 실행된 다음에는 확산과정이 중지되어, 혁신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나 농촌에까지는 혁신의 성과가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형태의 확산은 덜 발전된 지역(*underdeveloped regions*)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확산의 계층구조모델(*hierarchical system of diffusion*)이다. 여기서는 혁신이 발명의 발생지에서 다른 경제 중심지 내지 대도시로 확산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혁신은 계층적으로 더 낮은 중소도시로 과급된다. 또한 대도시는 공학자, 경영자, R&D 전문가, 대기업 의사결정 기관 등 관련 기관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혁신을 받아들이기 용이하다. 이 모델에서는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시간과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요소가 기업, 산업 및 시장잠재력의 특정 지역 집중을 나타내는 인구로 측정된 지역의 크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는 혁신이

대도시지역 혹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하여 점차 중소도시로 파급된다는 것으로, 이런 형태의 확산은 발전된 지역(developed regions)에서 이루어진다.

카니엘스(Caniëls)는 이러한 양 극단은 현실적으로 도출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보다는 확산 초기 단계에서는 계층구조모델이 주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 공간적 확산모델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초기에 혁신은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경제주체들에 의해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면 혁신의 주체가 부족한 농촌지역까지 성과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지베르트(Siebert)는 지역 간 지식의 이동 및 지역 특화에 영향을 주는 지식 전달자(sender), 지식 채택자(receiver), 지식 교류체계(system of communication) 등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세 요소 역시 지식전달의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약점, 즉,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발명의 정보전달자와 관련해 지베르트는 정부지원 연구소와 민간기업의 두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신의 정보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정부지원 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교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정부지원 연구소가 그 지역 내에 있으면 지식의 이동성은 더 커진다고 본다.

둘째, 새로운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보의 채택자는 주로 기업이다. 그는 만약 기술혁신이 채택자의 새로운 지식, 새로운 행태 혹은 상이한 조직간 조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확산의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베르트는 정부지원 연구소에 의한 기초 연구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발명은 지역 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기업들에 의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존 지역산업구조 혹은 지역 간 산업분포는 신지식의 활용 정도를 결정한다. 예컨대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대기업이 집적되어 있다면, 그 산업의 관련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빨리 채택되고 활용될 것이다.

셋째, 지식 전달자와 지식 채택자간의 의사소통 체계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는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다른 연구소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기업은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대학 근처에 위치한 기업은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원활해 더 잘, 더 빨리 지식을 입수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기술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대학연구 체계를 갖춘 지역은 산업R&D활동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베르트는 결국 자기 지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정 기술혁신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지역에서는 기술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방(imitation)이 발생할 것이다.

그는 만약 신기술지식에 대한 정보가 이동하지 않으면, 발명을 이룬 기업에 의해 신기술지식이 비밀로 보유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기술지식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게 이동한다 해도, 모든 지역이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R&D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기술지식은 부분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다. 새로운 발명을 더욱 개발하기보다는 모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식개발을 즉시 수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술지식은 기술혁신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에 편중될 것이므로, 기술진보에 따른 성장은 지역 간 불균등분포를 갖게 될 것이다.

2. 도농 간 면적 및 인구분포의 차이

도농 간 산업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기에 앞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면적과 인구분포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분석 대상 기간 도시와 농촌지역의 면적과 인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에 따른 양 지역의 산업구조 및 제조업 비중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표 2-1. 광역지자체별 농촌의 면적 및 인구비중

단위: %

| | 농촌 면적비중 | | 농촌 인구비중 | |
|-------|---------|------|---------|------|
| | 1995 | 2002 | 1995 | 2002 |
| 7대 도시 | 28.9 | 37.0 | 1.3 | 2.1 |
| 경 기 | 68.8 | 40.6 | 20.1 | 5.9 |
| 강 원 | 71.0 | 71.1 | 32.6 | 29.5 |
| 충 북 | 72.8 | 72.8 | 39.0 | 35.7 |
| 충 남 | 60.0 | 53.0 | 51.7 | 39.0 |
| 전 북 | 61.6 | 61.7 | 22.1 | 19.3 |
| 전 남 | 81.9 | 79.2 | 54.3 | 47.8 |
| 경 북 | 48.7 | 48.7 | 24.3 | 22.6 |
| 경 남 | 58.6 | 59.8 | 20.1 | 17.5 |
| 제 주 | 84.0 | 72.4 | 67.6 | 32.0 |
| 전 국 | 63.2 | 59.5 | 15.6 | 11.4 |

자료: 통계청DB.

전국 농촌지역의 면적 비중은 2002년 당시 전 국토 면적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¹ 예컨대 서울시 등 7대 도시 내 농촌 면적 비중은 2002년 당시 37%로 가장 낮은 반면,² 전남의 경우 79.2%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충북(72.8%), 제주(72.4%), 강원(71.1%) 등 총 4개 지자체의 농촌 면적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1995-2002년에 농촌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28.2%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는 인구 유입, 도시 발달 등으로 평택, 시흥, 파주, 고양, 이천, 용인 등 6개 지역이 군에서 시로 편입된데 크게 기인한다.

다음으로 전국의 농촌지역 인구비중 추이를 보면 1995년 15.6%이었으나, 그 후에도 조금씩 낮아져 2002년 당시 11.4%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인구의 증가는 자연증가,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 이주, 과거 농촌행정 구역의 도시 편입 등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00명 중 89명이 시민으로, 군민은 점차 희소해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촌인구의 비중이 30%를 하회하고 있다. 7대 도시의 경우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강화군, 용진군, 울산시 울주군 등 5개 군 지역이 면적 기준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인구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전남의 경우 전체의 47.8%가 농촌인구로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충남, 충북, 제주 등도 농촌인구 비중이 30% 이상이다. 이 기간 경기도는 자연감소 이 밖에도 군 지역의 시 편입 등으로 인해 농촌인구

1 자세한 통계는 부표 참조.

2 이 기간 7대 도시 내 농촌 면적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1995년 경남 울산시이던 것이, 1996년 울산광역시로 분리되면서, 울산광역시내 가장 큰 지역인 울주군이 농촌지역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가 3.7%포인트나 감소하여, 분석 대상기간에 가장 급속한 농촌인구 감소를 시현하였다.

결국, 1995-2002년 사이에 전국의 농촌지역 면적은 3.7%포인트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농촌인구는 4.2%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도농 간 제조업 비중 변화가 그 이상으로 변화를 보인다면, 이는 전국의 면적이나 인구 등 인문 환경의 변화를 초과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의 인구밀도 증가 추세를 보면, 군 지역의 감소 추세와 시 지역의 증가 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표 2-2>. 2002년 당시 7대 도시의 시 소재 지역은 인구밀도가 km^2 당 6,67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의 군 지역으로 1km^2 당 38명에

표 2-2. 지역별 도농 간 인구밀도 비교

단위: 인/ km^2

| | 도시 인구밀도 | | 농촌 인구밀도 | | 도시 인구밀도/ 농촌 인구밀도 | |
|-------|---------|---------|---------|-------|---------------------|------|
| | 1995 | 2002 | 1995 | 2002 | 1995 | 2002 |
| 7대 도시 | 7,180.5 | 6,673.1 | 226.6 | 244.6 | 31.7 | 27.3 |
| 경 기 | 1,975.0 | 1,551.3 | 224.7 | 143.4 | 8.8 | 10.8 |
| 강 원 | 214.6 | 226.1 | 42.5 | 38.4 | 5.0 | 5.9 |
| 충 북 | 434.8 | 474.9 | 103.7 | 98.6 | 4.2 | 4.8 |
| 충 남 | 261.7 | 287.9 | 186.7 | 163.3 | 1.4 | 1.8 |
| 전 북 | 505.4 | 511.7 | 89.4 | 75.8 | 5.7 | 6.7 |
| 전 남 | 464.3 | 428.3 | 121.6 | 103.0 | 3.8 | 4.2 |
| 경 북 | 214.8 | 218.6 | 72.8 | 67.2 | 3.0 | 3.3 |
| 경 남 | 658.4 | 609.6 | 117.2 | 87.0 | 5.6 | 7.0 |
| 제 주 | 335.2 | 734.2 | 133.4 | 131.9 | 2.5 | 5.6 |
| 전 국 | 1,055.6 | 1,059.3 | 114.1 | 92.9 | 9.3 | 11.4 |

자료: 통계청DB.

불과하다. 그러므로 7대 도시의 도시지역은 강원도의 농촌지역에 비해 1km²당 176배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밀도는 7대 도시, 경기, 전남,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인구밀도는 7대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 배율(=도시인구밀도/농촌인구밀도)을 보면, 7대 도시의 경우 도시의 인구밀도가 농촌지역 인구밀도의 27.3배인 반면, 충남 지역은 1.8배로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간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농 간 산업분포의 불균형

3.1. 도농 간 제조업 전체의 불균형 및 변화 추이

2002년 당시 전국 제조업대비 도시지역 제조업의 비중³을 보면, 사업체 수 등 주요 생산 관련 지표면에서 87~88%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만 80%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7대 도시, 경기, 전남, 경북 등은 도시지역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다.

충북은 사업체 수의 도시 비중이 31.5%로, 농촌지역에 더 많은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 부지 면적도 23.8%에 불과하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인접

³ 자세한 통계는 부표 참조.

군 지역인 진천, 음성, 청원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지역 제조업을 종사자 수나 생산액 기준으로 보아도 38% 정도에 불과해, 충북의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대기업을 두드러지게 더 많이 입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의 도시지역 내 사업체 수 분포는 34.1%에 불과하지만, 종사자 수는 50%를 넘고 있고,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면에서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에는 농촌지역에 비해 대기업을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주 지역은 도시지역 사업체 수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나, 종사자 수나 생산액은 30~40%이고, 부지 면적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 도시에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표 2-3. 지역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2002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
| 7대 도시 | 96.2 | 93.7 | 88.2 | 89.5 | 84.0 |
| 경 기 | 88.6 | 92.3 | 95.3 | 95.5 | 85.2 |
| 강 원 | 68.9 | 71.7 | 65.3 | 63.9 | 66.2 |
| 충 북 | 31.5 | 38.3 | 38.8 | 42.1 | 23.8 |
| 충 남 | 68.8 | 75.4 | 81.7 | 80.2 | 67.1 |
| 전 북 | 81.5 | 82.6 | 76.4 | 75.8 | 78.5 |
| 전 남 | 34.1 | 53.3 | 87.0 | 84.1 | 77.8 |
| 경 북 | 71.0 | 83.2 | 92.9 | 93.2 | 86.6 |
| 경 남 | 88.4 | 92.5 | 94.2 | 93.5 | 85.0 |
| 제 주 | 51.3 | 43.9 | 30.6 | 32.7 | 17.7 |
| 전 국 | 87.4 | 87.7 | 88.1 | 88.3 | 77.7 |

자료: 통계청DB.

이상의 결과를 1995년의 도시지역 제조업 비중과 비교해 보면, 도시 비중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제조업 주요 지표면에서 도시의 비중은 약 80% 내외였으므로,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그 후 7년 동안 도시의 비중이 약 8% 포인트 정도 높아진 수치이다. 결국 이 기간 도시지역에서의 공장부지는 소폭 증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내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생산액 등 대부분의 지표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도시의 인구나 면적 변화율인 4%포인트 내외의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주요 제조업지표의 변화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7대도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의 도시 비중은 낮아졌으며, 경북은 7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표 2-4. 지역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1995

| | 단위: % | | |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 7대 도시 | 96.8 | 96.4 | 96.1 | 96.2 | 91.6 |
| 경 기 | 64.9 | 65.9 | 62.2 | 54.3 | 52.5 |
| 강 원 | 67.6 | 76.0 | 74.4 | 76.3 | 85.0 |
| 충 북 | 33.0 | 46.1 | 51.4 | 57.5 | 27.8 |
| 충 남 | 57.2 | 66.0 | 71.2 | 73.2 | 61.2 |
| 전 북 | 84.4 | 88.5 | 87.1 | 86.1 | 80.4 |
| 전 남 | 31.1 | 51.6 | 85.1 | 86.1 | 78.3 |
| 경 북 | 73.8 | 85.8 | 92.7 | 92.2 | 86.8 |
| 경 남 | 76.0 | 85.6 | 92.2 | 91.1 | 90.1 |
| 제 주 | 56.3 | 44.4 | 40.0 | 41.2 | 20.3 |
| 전 국 | 80.5 | 81.5 | 82.3 | 78.8 | 75.7 |

자료: 통계청DB.

3.2. 도농 간 세부 제조업종별 불균형 및 변화 추이

2002년 당시 전국의 업종별 도시 비중을 보면, 22개 제조업 중 사업체 수 기준으로 9개, 생산액기준으로는 12개가 90%를 넘고 있다. 또한 사업체 수에서 부가가치까지 모두 90%를 넘는 업종은 시장수요와 노동력이 중요한 의복, 신발, 출판과,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한 기계, 컴퓨터, 통신장비 등 6개 산업이다.

표 2-5. 업종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2002

| | 단위: % | | |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 음식료품 | 63.8 | 71.4 | 76.4 | 78.5 | 58.6 |
| 섬유제품 | 76.1 | 79.4 | 82.4 | 81.3 | 73.8 |
| 봉제, 의복, 모피제품 | 99.4 | 99.1 | 99.3 | 99.3 | 84.1 |
| 가죽, 가방 및 신발 | 94.2 | 95.5 | 93.3 | 95.1 | 83.5 |
| 목재, 나무제품 | 83.6 | 88.1 | 90.9 | 89.3 | 82.5 |
| 펄프, 종이제품 | 84.9 | 82.3 | 77.5 | 76.7 | 69.6 |
| 출판, 인쇄 | 98.1 | 98.8 | 98.6 | 98.6 | 89.8 |
| 코크스, 석유정제품 | 83.5 | 75.4 | 76.5 | 82.3 | 81.5 |
| 화합물, 화학제품 | 78.5 | 85.2 | 90.1 | 89.8 | 85.1 |
| 고무, 플라스틱제품 | 85.5 | 83.8 | 78.8 | 78.6 | 69.5 |
| 비금속광물제품 | 65.2 | 67.7 | 69.9 | 68.7 | 59.6 |
| 제1차금속 | 87.9 | 86.8 | 85.8 | 85.7 | 83.9 |
| 조립금속제품 | 91.5 | 89.6 | 88.3 | 88.7 | 78.7 |
| 기계, 장비 | 93.2 | 92.4 | 93.5 | 93.2 | 84.6 |
| 컴퓨터, 사무용기기 | 96.5 | 98.9 | 99.8 | 99.8 | 98.3 |
| 전기기계 | 92.8 | 90.8 | 89.6 | 90.1 | 83.0 |
| 영상, 음향, 통신장비 | 94.3 | 92.5 | 93.3 | 91.4 | 84.4 |
| 의료, 정밀기기 | 95.8 | 93.3 | 89.2 | 88.3 | 82.4 |
| 자동차 | 87.5 | 88.9 | 92.2 | 92.1 | 87.3 |
| 운송장비 | 84.9 | 89.3 | 93.2 | 93.1 | 85.3 |
| 가구 | 89.9 | 89.9 | 90.2 | 89.0 | 80.3 |
| 재생용 가공원료 | 81.1 | 86.0 | 90.7 | 89.0 | 86.3 |

자료: 통계청DB.

다음으로 도시 비중이 비교적 낮은 산업은 음식료품, 종이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등 전통산업이다. 그 중 음식료품은 농산품을 활용하는 산업이고, 비금속광물은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촌에 많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고무·플라스틱제품은 공해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입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펄프·종이제품은 원료수입에 따른 항만 입지형이라서 도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2-6. 업종별 도시의 제조업 비중 변화, 1995-02

단위: %포인트

| | 사업체 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
| 음식료품 | 11.7 | 8.1 | 8.9 | 10.4 | 3.5 |
| 섬유제품 | -0.8 | -0.5 | 2.0 | 1.6 | 2.4 |
| 봉제, 의복, 모피제품 | 0.6 | 2.0 | 2.1 | 1.9 | 7.0 |
| 가죽, 가방 및 신발 | 2.2 | 2.5 | 6.5 | 5.5 | 12.3 |
| 목재, 나무제품 | 10.5 | 7.6 | 6.2 | 5.1 | 1.6 |
| 펄프, 종이제품 | 13.2 | 8.8 | 3.0 | 2.1 | -1.5 |
| 출판, 인쇄 | 2.7 | 3.7 | 3.2 | 3.6 | 9.8 |
| 코크스, 석유정제품 | -3.7 | -22.9 | -23.1 | -17.4 | -18.3 |
| 화합물, 화학제품 | 9.0 | 6.7 | 3.3 | 6.7 | -2.9 |
| 고무, 플라스틱제품 | 11.2 | 11.2 | 4.7 | 4.1 | 3.9 |
| 비금속광물제품 | 10.9 | 7.8 | 5.2 | 3.7 | 0.5 |
| 제1차금속 | 10.7 | 1.4 | -5.0 | -3.7 | -2.6 |
| 조립금속제품 | 7.1 | 7.7 | 7.6 | 7.7 | 4.3 |
| 기계, 장비 | 6.0 | 6.1 | 6.0 | 5.8 | 2.5 |
| 컴퓨터, 사무용기기 | 8.5 | 9.6 | 6.4 | 5.9 | 22.5 |
| 전기기계 | 7.1 | 9.0 | 7.5 | 8.1 | 7.2 |
| 영상, 음향, 통신장비 | 6.5 | 11.3 | 21.2 | 32.8 | 10.6 |
| 의료, 정밀기기 | 6.6 | 5.4 | 1.7 | 2.4 | 9.6 |
| 자동차 | 3.0 | 3.7 | 6.2 | 9.7 | 5.8 |
| 운송장비 | 1.4 | -2.7 | -3.6 | -3.7 | -3.0 |
| 가구 | 13.0 | 11.7 | 12.0 | 11.3 | 18.0 |
| 재생용 가공원료 | 10.6 | 8.2 | 0.6 | 1.1 | 4.2 |

자료: 통계청DB.

1995-2002년 도시의 제조업 비중 변화를 보면,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과 운송장비의 도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업종은 울산광역시 분리에 따라 울주군에 입주한 기업들의 비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분석 대상기간 도시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크게 높아진 업종은 영상, 음향, 통신장비로, 생산액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구산업이다.

3.3. 도농 간 서비스업의 불균형 및 변화 추이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의 16개 광역지자체의 도농 간 서비스업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도농 간 격차가 확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간 전국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모두 2% 이내의 낮은 성장에 머물렀다. 그러나 군 지역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각각 1.6%, 2.5% 감소한 반면, 시 지역은 2% 이상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군 지역 내에서도 7대 도시의 서비스업은 9%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0% 이상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에서는 경기도가 7~8% 증가하여 군 지역 감소분을 도시지역에서 만회하였으며, 경남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표 2-7. 도농 간 서비스업의 비중 및 증가율 변화 추이, 1995-02

단위: 개, 명, %

| 시군구분 | 지역 | 1995년 | | 2002년 | | 연평균증가율 |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군지역 | 7대도시 | 13,371 | 42,860 | 24,617 | 79,803 | 9.1 | 9.3 |
| | 경기 | 72,328 | 260,389 | 33,782 | 110,713 | -10.3 | -11.5 |
| | 강원 | 30,304 | 94,389 | 31,306 | 99,419 | 0.5 | 0.7 |
| | 충북 | 24,970 | 81,036 | 28,120 | 92,358 | 1.7 | 1.9 |
| | 충남 | 48,848 | 154,047 | 41,808 | 132,298 | -2.2 | -2.2 |
| | 전북 | 19,364 | 58,992 | 20,073 | 62,491 | 0.5 | 0.8 |
| | 전남 | 52,859 | 172,817 | 51,084 | 160,869 | -0.5 | -1.0 |
| | 경북 | 32,792 | 101,709 | 34,656 | 105,080 | 0.8 | 0.5 |
| | 경남 | 39,518 | 163,712 | 30,996 | 94,512 | -3.4 | -7.5 |
| | 제주 | 7,030 | 22,359 | 8,772 | 27,835 | 3.2 | 3.2 |
| | 군 합계 | 341,384 | 1,152,310 | 305,214 | 965,378 | -1.6 | -2.5 |
| (비중) | (13.9) | (11.7) | (10.9) | (8.7) | | | |
| 시지역 | 7대도시 | 1,235,652 | 5,455,528 | 1,394,827 | 6,061,265 | 1.7 | 1.5 |
| | 경기 | 270,181 | 987,432 | 430,676 | 1,719,690 | 6.9 | 8.2 |
| | 강원 | 63,288 | 244,202 | 74,981 | 276,470 | 2.5 | 1.8 |
| | 충북 | 52,275 | 190,282 | 59,895 | 221,864 | 2.0 | 2.2 |
| | 충남 | 46,967 | 167,479 | 66,269 | 234,840 | 5.0 | 4.9 |
| | 전북 | 82,681 | 305,143 | 89,263 | 325,916 | 1.1 | 0.9 |
| | 전남 | 57,668 | 213,198 | 65,373 | 236,057 | 1.8 | 1.5 |
| | 경북 | 107,489 | 387,327 | 127,217 | 438,521 | 2.4 | 1.8 |
| | 경남 | 169,536 | 594,863 | 149,527 | 534,414 | -1.8 | -1.5 |
| | 제주 | 24,754 | 109,845 | 30,531 | 129,499 | 3.0 | 2.4 |
| | 시 합계 | 2,110,491 | 8,655,299 | 2,488,559 | 10,178,536 | 2.4 | 2.3 |
| (비중) | (86.1) | (88.3) | (89.1) | (91.3) | | | |
| 총합계 | 2,451,875 | 9,807,609 | 2,793,773 | 11,143,914 | 1.9 | 1.8 | |

자료: 통계청DB.

4. 농촌 간 산업분포의 불균형

앞서 제조업의 도시편중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그나마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몇몇 농촌지역에 제조업이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농촌지역은 제조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이 특히 심한 지역은 경기, 충북, 경남이며, 강원도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02년 당시 경기도내 6개 군 중에서 4개군은 사업체 수비중이 10% 미만이며, 양평군의 제조업 생산액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양주군과 포천군은 경기도내 농촌지역 총생산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주군은 부지 면적이나 생산액은 많은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매우 적게 나타나, 중간 이상 규모의 자본집약적인 업체가 다수 입지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간 제조업 격차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은 충북이다. 충북은 9개 군이 있는데, 제조업이 음성, 청원, 진천 등 3개 군에 밀집

표 2-8. 경기도의 농촌지역 간 제조업 비중 차이, 2002

단위: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인구 |
|-----|-------|-------|-------|-------|-------|-------|
| 가평군 | 1.5 | 1.4 | 1.3 | 1.8 | 2.3 | 9.4 |
| 양주군 | 48.3 | 48.2 | 45.8 | 44.1 | 28.8 | 24.3 |
| 양평군 | 1.5 | 0.9 | 0.9 | 0.9 | 2.7 | 14.1 |
| 여주군 | 6.5 | 8.9 | 15.8 | 17.4 | 21.5 | 17.7 |
| 연천군 | 3.1 | 3.5 | 2.8 | 2.7 | 9.3 | 8.6 |
| 포천군 | 39.2 | 37.2 | 33.4 | 33.1 | 35.4 | 25.9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DB.

되어 있다. 3개 군의 인구는 45.2%에 불과하나, 제조업 비중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80.5%, 사업체 수 기준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구수 기준으로 충북 군 지역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영동군은 생산액 기준으로 1.8%에 불과하며, 인구수 기준으로 7%를 상회하는 괴산, 보은지역도 도내 생산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경남에는 10개 군이 있는데, 면적 비중을 보면 함안(6.6%), 고성(8.2%), 창녕(8.5%) 등 3개 지역 합이 23.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은 적은 편인데, 인구와 제조업이 밀집되고 있어 경남의 농촌지역 간 지역 불균형은 큰 편이다. 예컨대 함안군 1개 지역에 전체 인구의 50%, 제조업의 40~5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구규모 2위인 고성군과 3위인 창녕군까지 합하면, 이 3개 군은 생산액 기준으로 도내 80%에 근접하고 있다.

표 2-9. 충북도의 농촌지역 간 제조업 비중 차이, 2002

단위: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인구 |
|-----|-------|-------|-------|-------|-------|-------|
| 괴산군 | 4.0 | 3.3 | 2.2 | 2.2 | 7.9 | 7.8 |
| 단양군 | 1.8 | 2.7 | 6.8 | 11.0 | 6.6 | 7.0 |
| 보은군 | 2.7 | 1.6 | 1.1 | 1.4 | 8.4 | 7.6 |
| 영동군 | 3.3 | 2.7 | 1.8 | 1.9 | 3.2 | 16.2 |
| 옥천군 | 9.9 | 7.8 | 5.5 | 5.8 | 5.7 | 5.8 |
| 음성군 | 30.2 | 29.3 | 26.9 | 24.6 | 25.9 | 11.2 |
| 증평군 | 2.4 | 2.9 | 2.0 | 1.9 | 1.6 | 10.4 |
| 진천군 | 18.2 | 22.4 | 21.0 | 19.7 | 17.9 | 11.0 |
| 청원군 | 27.3 | 27.4 | 32.6 | 31.6 | 22.9 | 23.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DB.

표 2-10. 경남도의 농촌지역 간 제조업 비중 차이, 2002

단위: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인구 |
|-----|-------|-------|-------|-------|-------|-------|
| 거창군 | 6.3 | 5.1 | 3.5 | 3.7 | 3.6 | 3.5 |
| 고성군 | 13.2 | 16.3 | 9.7 | 9.4 | 16.8 | 18.0 |
| 남해군 | 2.9 | 1.2 | 0.7 | 0.7 | 0.8 | 0.8 |
| 산청군 | 3.6 | 2.2 | 1.8 | 2.0 | 2.8 | 2.6 |
| 의령군 | 4.7 | 6.3 | 6.7 | 6.6 | 5.7 | 6.2 |
| 창녕군 | 11.8 | 12.2 | 13.6 | 10.7 | 8.3 | 8.7 |
| 하동군 | 3.6 | 1.9 | 2.4 | 1.9 | 4.5 | 1.7 |
| 함안군 | 39.6 | 45.5 | 54.9 | 57.8 | 49.1 | 50.0 |
| 함양군 | 4.9 | 3.3 | 2.3 | 2.2 | 3.5 | 3.3 |
| 합천군 | 9.3 | 5.9 | 4.2 | 5.0 | 4.9 | 5.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DB.

5. 업종별 · 지역별 유형화에 의한 정책적 대응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모델의 현실적합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업종별 · 지역별 유형화에 의해 각 유형에 알맞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형태로 업종과 지역을 유형화하는 것은 산업활동이나 사회여건을 반영하는 대표변수를 통해 지역경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경제 상황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유형화에서는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도시지역에 두드러지게 많이 입지한 업종 혹은 농촌지역에 많이 입지한 업종을 찾아내어 도시특화형, 농촌특화형 등으로 제조업종을 구분하였다.

지역별 유형화에서는 제조업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구 증가율의 두 가지 대표변수로 유형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 변수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크게 4개 그룹, 작게는 16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를 파악하였다.

5.1. 이론모델의 적합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에 의한 도농 간 격차분석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여러 형태의 도농 간 산업격차가 존재하며,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 및 16개 지자체 간에서의 도농 간 산업격차뿐 아니라, 16개 지자체내의 도농 간 격차, 농농 간 격차 등 여러 차원의 격차가 존재하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산업격차는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의 도시유입을 통해 농촌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도농 간 산업발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지역 간 성장 격차이론을 이 연구에 적용할 경우, 신고전과 이론보다는 칼도(Kaldo)의 누적적 인과관계론이나 불완전 확산모델 중 공간확산모델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술이 축적된 도시지역은 그 지역 내부에서 지식으로 체화되어, 그렇지 못한 농촌지역과 기술격차, 나아가 성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기술이 중시되기 때문에,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농업이나 서비스업보다는 기술이 체화될 수 있는 제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 특히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지식 기반산업이 밀집된 지역

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오고, 결국 지역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농공단지 등이 중심이 되어, 환경오염이 적은 지연산업이 농촌의 고용과 소득증대를 위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지역이라는 방향에서 보면 불완전 확산모델 중 공간확산모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장의 중심지 혹은 인접지역이 성장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은 혁신의 성과 내지는 혜택을 적게 누리게 될 것이다.

농촌지역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제조업의 접목과 함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혁신을 받아들이기 용이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RIS구축에 있어서는 농촌에 더 많이 입지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지역의 대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 등과의 상호 토론, 학습을 통해 발전된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2. 업종별 유형화

여기서는 도시와 농촌의 산업특화를 살펴보기 위해 입지상(LQ: Local Quotient)을 원용하여 산업별 특화도를 분석하여 특화산업을 추출하였다.

○ 농촌지역 특화도

$$= (\text{전국 군 지역 I산업 생산액} / \text{전국 군 지역 제조업 총생산액}) \div (\text{전국 I산업 생산액} / \text{전국 제조업 총생산액})$$

○ 도시지역 특화도

$$= (\text{전국 구지역 I산업 생산액} / \text{전국 구지역 제조업 총생산액}) \div (\text{전국 I산업 생산액} / \text{전국 제조업 총생산액})$$

보통의 경우, LQ가 1보다 클 경우 해당 지역에 특정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의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1.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제조업 특화도 분석

| | 농촌지역 | | 도시지역 | |
|--------------|------|------|------|------|
| | 1995 | 2002 | 1995 | 2002 |
| 음식료품 | 1.84 | 1.99 | 0.82 | 0.87 |
| 섬유제품 | 1.11 | 1.49 | 0.98 | 0.93 |
| 봉제, 의복, 모피제품 | 0.16 | 0.06 | 1.18 | 1.13 |
| 가죽, 가방 및 신발 | 0.75 | 0.56 | 1.05 | 1.06 |
| 목재, 나무제품 | 0.86 | 0.76 | 1.03 | 1.03 |
| 펄프, 종이제품 | 1.44 | 1.89 | 0.90 | 0.88 |
| 출판, 인쇄 | 0.26 | 0.12 | 1.16 | 1.12 |
| 코크스, 석유정제품 | 0.02 | 1.98 | 1.21 | 0.87 |
| 화합물, 화학제품 | 0.75 | 0.84 | 1.05 | 1.02 |
| 고무, 플라스틱제품 | 1.46 | 1.78 | 0.90 | 0.89 |
| 비금속광물제품 | 2.00 | 2.54 | 0.79 | 0.79 |
| 제1차금속 | 0.52 | 1.20 | 1.10 | 0.97 |
| 조립금속제품 | 1.09 | 0.98 | 0.98 | 1.00 |
| 기계, 장비 | 0.71 | 0.55 | 1.06 | 1.06 |
| 컴퓨터, 사무용기기 | 0.37 | 0.01 | 1.13 | 1.13 |
| 전기기계 | 1.01 | 0.88 | 1.00 | 1.02 |
| 영상, 음향, 통신장비 | 1.58 | 0.56 | 0.88 | 1.06 |
| 의료, 정밀기기 | 0.71 | 0.91 | 1.06 | 1.01 |
| 자동차 | 0.79 | 0.66 | 1.04 | 1.05 |
| 운송장비 | 0.18 | 0.57 | 1.18 | 1.06 |
| 가구 | 1.23 | 0.82 | 0.95 | 1.02 |
| 재생용 가공원료 | 0.56 | 0.78 | 1.09 | 1.03 |

자료: 통계청DB에 의거 계산.

5.3. 지역별 유형화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인구 증가율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을 감안하여, 도농지역을 다음 <표 2-13>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그룹은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이다. B 그룹은 이 두 변수가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다. C 그룹은 이 두 변수가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미흡한 지역이다. D 그룹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 인구 증가율은 1% 이상 감소를 보이고 있는 열악한 지역이다.

이상과 같은 4개의 그룹은 생산과 인구를 구분하기 위해 제조업 생산 증가율에 대문자 표기, 인구 증가율에 소문자 표기로 구분하며, Aa 그룹, Dd 그룹 등, 총 16개 그룹으로 세분될 수 있다.

표 2-12. 주요 제조업의 도농 간 특화유형 분류

| 특화 유형 | 세부 특화산업 | 산업수 |
|-----------|--|-----|
| 농촌특화형 |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 5개 |
| 도시특화형 | 봉제·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출판·인쇄, 화합물·화학제품, 기계·장비, 컴퓨터·사무용기기, 자동차, 운송장비, 재생용가공원료 | 10개 |
| 도시특화로 변화형 | 영상·음향·통신장비, 가구, 전기기계 | 3개 |
| 농촌특화로 변화형 | 코크스·석유정제품, 제1차금속 | 2개 |
| 농촌-도시 동일형 | 조립금속제품, 의료·정밀기기 | 2개 |

그림 2-1. 도농지역의 그룹화, 유형화

| | |
|---|--|
| 제조업 생산 증가율: A, B 인구 증가율: a, b [I 그룹] | 제조업 생산 증가율: A, B 인구 증가율: c, d [II 그룹] |
| 제조업 생산 증가율: C, D 인구 증가율: a, b [III 그룹] | 제조업 생산 증가율: C, D 인구 증가율: c, d [IV 그룹] |

I 그룹은 생산과 인구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II 그룹은 제조업 발전은 순조로우나, 인구 증가율이 낮아,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정주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할 지역이다. III 그룹은 인구는 증가하는데, 제조업 활동은 미약한 곳으로, 지역이 장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 자극이 필요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IV 그룹은 분석 기간 인구와 제조업 활동이 모두 침체되었던 지역으로, 자연산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활동 자극과, 사회복지 등 정주생활 지원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표 2-13. 도농지역의 그룹화, 유형화의 기준

| 구분 | 특징 | 제조업생산증가율 | 인구증가율 |
|-------|---------------------------|-------------|---------------|
| 전국 평균 | - | 8.3% | 0.72% |
| A 그룹 |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매우 바람직한 지역 | 15% 이상 (A) | 2.5% 이상 (a) |
| B 그룹 |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지역 | 8~15% (B) | 0.7~2.5% (b) |
| C 그룹 | 전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미흡한 지역 | 0~8% (C) | -1~0.7% (c) |
| D 그룹 |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지역 | 마이너스 성장 (D) | -1% 미만 성장 (d) |

표 2-14.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에 의한 유형 구분(1)

| I 그룹 | | | | II 그룹 | | | |
|--------|--------|---------|--------|--------|--------|--------|--------|
| A-a | A-b | B-a | B-b | A-c | A-d | B-c | B-d |
| 경기 시흥시 | 전남 순천시 | 경기 포천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양양군 | 경기 연천군 | 경기 광명시 | 강원 고성군 |
| 경기 안성시 | | 경기 고양시 | 경기 하남시 | 강원 홍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북 음성군 | 강원 양구군 |
| 충남 아산시 | | 경기 광주시 | 경기 성남시 | 충남 당진군 | 강원 평창군 | 충북 청원군 | 강원 인제군 |
| 충남 천안시 | | 경기 화성시 | 경기 평택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금산군 | 충북 제천시 | 강원 철원군 |
| 경남 양산시 | | 경기 김포시 | 충북 진천군 | 전북 완주군 | 충남 보령시 | 충남 연기군 | 충북 괴산군 |
| | | 경기 남양주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영암군 | 전북 부안군 | 충남 공주시 | 충북 영동군 |
| 경기 파주시 | | 전남 여수시 | | 전북 순창군 | 전북 군산시 | 충남 예산군 | |
| 경북 칠곡군 | | 경북 군위군 | | 전북 장수군 | 전북 익산시 | 충남 청양군 | |
| 경북 경산시 | | 경남 마산시 | | 전북 진안군 | 경북 성주군 | 충남 태안군 | |
| 경북 구미시 | | 경남 사천시 | | 전남 무안군 | 경북 경주시 | 충남 논산시 | |
| 경남 거제시 | | 제주 북제주군 | | 경북 울릉군 | 경북 김천시 | 전북 무주군 | |
| 경남 김해시 | | | | 경북 청송군 | 경북 영천시 | 전북 김제시 | |
| | | | | 경남 거창군 | 경남 함안군 | 전북 정읍시 | |
| | | | | 경남 의령군 | 경남 통영시 | 전남 구례군 | |
| | 경남 창령군 | | | | 전남 장성군 | | |
| | | | | | 전남 장흥군 | | |
| | | | | | 전남 진도군 | | |
| | | | | | 전남 함평군 | | |
| | | | | 전남 해남군 | | | |
| | | | | 전남 보성군 | | | |
| | | | 경북 봉화군 | | | | |
| | | | 경북 영덕군 | | | | |
| | | | 경북 예천군 | | | | |
| | | | 경북 상주시 | | | | |
| | | | 경남 고성군 | | | | |
| | | | 경남 산청군 | | | | |
| | | | 경남 하동군 | | | | |

이런 기준에 입각하여 지역을 그룹핑하면 <표 2-14>, <표 2-15>와 같이 여러 형태의 그룹이 도출된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7대 도시의 개별 구단위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158개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I 그룹에는 24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9개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이처럼 제조업생산과 인구 증가 면에서 활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5.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에 의한 유형 구분(2)

| Ⅲ 그룹 | | | Ⅳ 그룹 | | | | |
|---------|--------|--------|---------|--------|--------|--------|--------|
| C-a | C-b | D-a | C-c | C-d | D-c | D-d | |
| 경기 양주군 | 경기 여주군 | 경기 구리시 | 경기 가평군 | 강원 영월군 | 전남 나주시 | 강원 동해시 | 강원 삼척시 |
| 경기 안산시 | 경기 군포시 | | 경기 과천시 | 강원 화천군 | 경북 영양군 | | 충남 서천군 |
| 경기 의정부시 | 강원 속초시 | | 경기 안양시 | 강원 횡성군 | 경북 의성군 | | 경북 울진군 |
| 경기 이천시 | 강원 춘천시 | | 경기 동두천시 | 강원 태백시 | 경북 청도군 | | 경북 문경시 |
| 경기 오산시 | 강원 원주시 | | 경기 부천시 | 충북 단양군 | 경북 안동시 | | 경북 밀양시 |
| 경기 용인시 | 충북 청주시 | | 강원 강릉시 | 충북 보은군 | 경북 영주시 | | |
| 경기 수원시 | 전북 진주시 | | 충북 충주시 | 충북 옥천군 | 경남 남해군 | | |
| 경기 의왕시 | 전남 광양시 | | 전남 목포시 | 충남 부여군 | 경남 함양군 | | |
| | 경남 진해시 | | 경북 고령군 | 충남 홍성군 | 경남 합천군 | | |
| | 경남 창원시 | | 경북 포항시 | 전북 고창군 | | | |
| | 제주 제주시 | | 경남 진주시 | 전북 임실군 | | | |
| | | | 제주 남제주군 | 전북 남원시 | | | |
| | | | 제주 서귀포시 | 전남 강진군 | | | |
| | | | | 전남 고흥군 | | | |
| | | | | 전남 곡성군 | | | |
| | | | | 전남 담양군 | | | |
| | | | | 전남 신안군 | | | |
| | | | | 전남 영광군 | | | |
| | | | | 전남 완도군 | | | |

Ⅱ그룹은 67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49개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이 그룹은 산업활동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농촌지역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Ⅲ그룹은 20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8개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이 그룹은 이렇다 할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Ⅳ그룹은 47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28개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이 그룹은 심각한 생산 감소와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변수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후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므로 과천시, 포항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지역들이 낙후지역이라기보다는, 분석 대상 기간 제조업과 인구가 동시에 크게 침체되었던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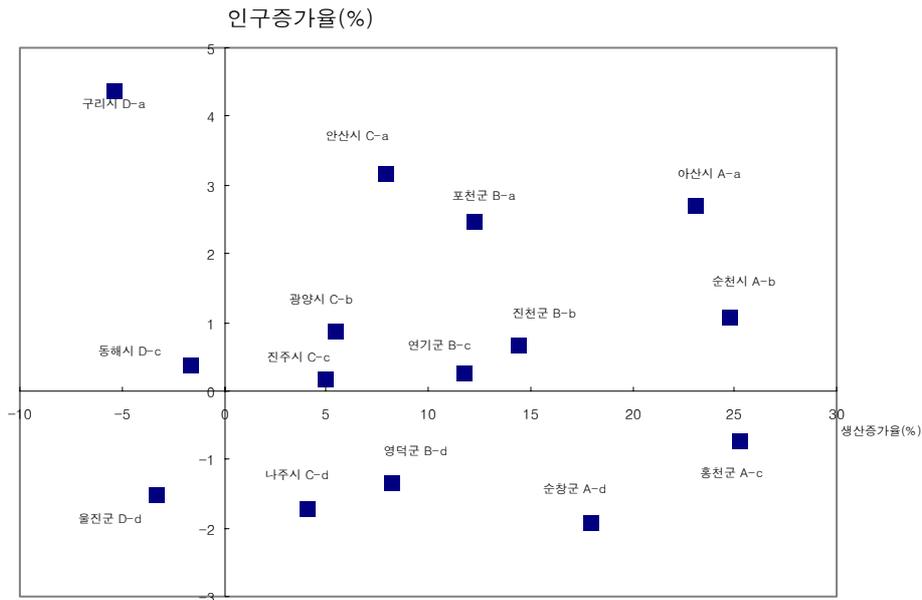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각 유형별로 예시하면 다음의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부터 종축방향으로 D 그룹, C 그룹, B 그룹, A 그룹의 순으로 도시된다.

5.4. 종합판단 및 정책처방

어떤 지역이 산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지역산업과 사회의 변화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육성대상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지역의 유형이 파악되면, 그 지역이 농촌지역인지 아니면 도시지역인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앞

그림 2-2. 유형별 인구 증가율과 생산 증가율의 예시도



서 제시한 각 그룹에 알맞은 정책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

I 그룹은 제조업 생산과 인구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의 산업은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소, 대학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조로운 지역혁신체제(RIS)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II 그룹은 제조업 발전은 순조로우나, 인구 증가율이 낮아,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정주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할 지역이다. 그러므로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병원, 도로, 학교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SOC를 보완하는 지역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Ⅲ그룹은 인구는 증가하는데, 제조업 활동이 미약한 곳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부합하는 산업이 입지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인근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이나 해당 지역의 지연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 지원하는 등 산업활동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Ⅳ그룹은 인구와 제조업 활동이 모두 열악한 지역으로, 지연산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활동 자극과, 사회복지 등 정주생활 지원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특히 이 그룹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체가 자리 잡으려 해도 Ⅲ그룹과는 달리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 유치시 지나치게 노동집약적이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도시 근로자들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농촌 사례 지역의 산업발전 실태비교

도농 간 산업발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조업 측면에서 발전된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남 함안군과, 제조업 생산이 빈약한 충북 영동군을 대상으로 2차 자료와 면접에 의한 실태분석을 하였다. 대상 지역은 농촌지역 내 산업불균형이 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인 경남과 충북을 선정하였다.

경남 함안군은 도내 10개 군 중 인구비중이 50%이고, 생산액 비중은 도내 54.9%에 달한다. 충북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도내의 발전된 지역보다는 산업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을 선정하였다. 2002년 당시 충북 영동군은 도내 9개 군 중 인구비중은 16.2%나 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1. 산업발전지역의 사례: 경남 함안군

1.1. 입지여건

경남 함안군은 마산시, 창원시 및 진주시 등과 인접한 도시근교 배후

지역으로, 1개 읍,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함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63,435명이며, 1995년 당시 67,894명에 비해 4천여 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함안군은 마산, 창원 등 인근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자들이 군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이는 이 지역 근로자들이 동에서 서로 뺀 남해고속도로와 북에서 남으로 뺀 구마고속도로 및 영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통여건은 근로자 통근뿐 아니라, 농수산물 및 제품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인근 대도시와 일일생활권을 이룬다.

함안군은 인접 도시지역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고, 넓은 용지 확보가 용이하여 제조업체들이 입주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에는 아라가야의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어, 공단 개발 시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약간의 규제가 존재한다.

함안군청에서는 농업만으로는 농촌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공병진에 의해 군내에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조성 및 분양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안군에서는 중소기업 유치 확대와 시설 채소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함안군에는 창원의 기계산업 클러스터와 접목되어 자동차, 선박 등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업체가 다수 입지해 있다. 함안군 내 기계부품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철근을 생산하기 위해 (주)한국제강이 개별입지에 입주해 있다.

1.2. 제조업 · 서비스업의 현황

1.2.1. 산업분포

통계청 통계에 의할 경우, 함안군에는 2002년 당시 3,925개 사업체에 20,196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업체의 유형을 보면 개인사업체가 3,211개로,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법인은 362개로 9%에 불과하다. 그러나 종사자 수 비중으로 보면, 회사법인 종사자 수가 개인사업체 종사자 수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함안군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체가 838개로 가장 많지만, 그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810개를 차지하고 있다. 함안군에 제조업체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입지 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대도시 인접지역이면서, 교통 및 생활 여건이 다른 군 지역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다.

표 3-1. 함안군의 산업별 사업체 형태

단위: 개, 명

| | 합계 | | 개인사업체 | | 회사법인 | | 기타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전 체 | 3,925 | 20,196 | 3,211 | 8,418 | 362 | 8,715 | 352 | 3,063 |
| 제조업 | 838 | 10,885 | 587 | 3,169 | 244 | 7,589 | 7 | 127 |
| 숙박, 음식점업 | 810 | 1,777 | 805 | 1,686 | 35 | 277 | 17 | 61 |
| 운수, 창고업 | 346 | 779 | 314 | 450 | 13 | 143 | 18 | 179 |
| 금융보험업 | 38 | 432 | 3 | 4 | 11 | 107 | 24 | 321 |
| 교육서비스업 | 141 | 1,089 | 82 | 236 | 3 | 93 | 56 | 760 |
| 기 타 | 1,752 | 5,234 | 1,420 | 2,873 | 56 | 506 | 230 | 1,615 |

자료: 함안군, 『함안군 통계연보』, 2003.

함안군의 사업체는 인구비중이 높은 가야읍과 칠원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사업체 수는 비교적 많지만, 4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8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칠원면의 경우는 20명 이상 종사자 수를 갖고 있는 사업체가 46개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함안군 사업체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를 보면,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의 순이다. 제조업체수는 칠원면에 341개로, 전체의 41%가 입지해 있으며, 종사자 수 비중은 27.5%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은 가야읍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칠원면, 군북면 등의 순이다.

표 3-2. 함안군의 종사자 규모별, 읍면별 사업체 수 분포

단위: 개, 명

| | 합계 | | 1~4명 | | 5~9명 | | 10~19명 | | 20명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전체 | 3,925 | 20,196 | 3,195 | 5,759 | 341 | 2,279 | 193 | 2,633 | 196 | 9,525 |
| 가야읍 | 1,308 | 4,209 | 1,169 | 1,939 | 79 | 500 | 32 | 444 | 28 | 1,326 |
| 함안면 | 133 | 1,313 | 102 | 159 | 4 | 25 | 14 | 193 | 13 | 936 |
| 군북면 | 498 | 2,757 | 410 | 724 | 35 | 241 | 26 | 370 | 27 | 1,422 |
| 법수면 | 192 | 1,437 | 134 | 238 | 24 | 164 | 15 | 220 | 19 | 815 |
| 대산면 | 293 | 931 | 261 | 423 | 18 | 113 | 8 | 108 | 6 | 287 |
| 칠서면 | 275 | 2,416 | 193 | 369 | 34 | 231 | 21 | 258 | 27 | 1,558 |
| 칠북면 | 105 | 722 | 77 | 126 | 14 | 101 | 5 | 71 | 9 | 424 |
| 칠원면 | 892 | 4,692 | 682 | 1,465 | 111 | 752 | 53 | 707 | 46 | 1,768 |
| 산인면 | 184 | 1,614 | 126 | 253 | 20 | 136 | 17 | 236 | 21 | 989 |
| 여향면 | 45 | 105 | 41 | 63 | 2 | 16 | 2 | 26 | 0 | 0 |

자료: 전계서.

함안군의 주요 제조업은 주로 경남의 전략산업인 기계, 금속 및 자동차업종이다. 기계류의 경우 완제품보다는 부품위주이며, 그 외에 주요 품목으로는 식료품, 치약, 비누, 군납용 식품 등을 들 수 있다. 함안군내 주요 대기업으로는 신진물산(참치통조림), 한국제강(이형철근), 동아오츠카(이온음료), 삼성테스코(물류), 원우성업(담요, 카펫) 등이 있다. 함안군내 전체 제조업종의 1/3 정도가 칠원면에 입지해 있으며, 그다음으로 칠서면에 많이 입지해 있다.

1.2.2. 산업 및 농공단지의 조성

함안군에는 1개의 지방산업단지외 5개의 농공단지가 산재한다. 특히 칠서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총면적 93만평, 분양대상면적 77만평으로,

표 3-3. 함안군의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분포

단위: 개, 명

| | 합계 | | 제조업 | | 도소매업 | | 숙박, 음식업 | | 개인서비스업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전체 | 3,925 | 20,196 | 838 | 10,885 | 928 | 1,924 | 810 | 1,777 | 554 | 1,181 |
| 가야읍 | 1,308 | 4,209 | 114 | 474 | 383 | 725 | 297 | 596 | 200 | 444 |
| 함안면 | 133 | 1,313 | 34 | 1,081 | 25 | 38 | 24 | 39 | 26 | 36 |
| 군북면 | 498 | 2,757 | 78 | 1,588 | 135 | 275 | 105 | 309 | 74 | 150 |
| 범수면 | 192 | 1,437 | 64 | 1,088 | 40 | 80 | 40 | 70 | 21 | 51 |
| 대산면 | 293 | 931 | 48 | 404 | 78 | 120 | 63 | 116 | 45 | 58 |
| 칠서면 | 275 | 2,416 | 76 | 1,582 | 41 | 126 | 59 | 170 | 41 | 104 |
| 칠북면 | 105 | 722 | 23 | 525 | 16 | 27 | 23 | 44 | 10 | 12 |
| 칠원면 | 892 | 4,692 | 341 | 2,994 | 175 | 461 | 134 | 288 | 100 | 244 |
| 산인면 | 184 | 1,614 | 54 | 1,117 | 24 | 56 | 48 | 117 | 30 | 72 |
| 여항면 | 45 | 105 | 6 | 32 | 11 | 16 | 17 | 28 | 7 | 10 |

자료: 전계서.

1천명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다. 칠서지방산단은 1991년 착공 이래 총사업비가 약 3천억원이 소요되었으며, 13년간 개발되고 있으나 부분 준공에 머물러 있다. 이 산업단지에는 2004년 당시 56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완료하여 약 9만여 평이 미분양 상태이며, 조립금속 등 14개 업종을 중점 유치업종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단지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일본어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칠서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 동 단지는 부분 준공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1-2년 내에 완전 준공될 예정이다. 동 단지는 지반이 견고하여 기반시설 비용이 적게 들며, 낙동강의 풍부한 용수를 이용한 자체 공급시설을 갖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등을 갖고 있다. 칠서산업

표 3-4. 함안군내 주요 제조업종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명

| | 합계 | | 제조업 | | 조립금속제품 | | 기타기계장비 | | 자동차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전체 | 371 | 9,579 | 28 | 639 | 69 | 1,313 | 86 | 1,923 | 36 | 944 |
| 가야읍 | 16 | 348 | 0 | 0 | 5 | 84 | 0 | 0 | 0 | 0 |
| 함안면 | 21 | 1,033 | 0 | 0 | 3 | 122 | 3 | 58 | 3 | 48 |
| 군북면 | 45 | 1,505 | 4 | 68 | 14 | 253 | 7 | 183 | 3 | 48 |
| 범수면 | 42 | 1,040 | 5 | 122 | 8 | 175 | 9 | 271 | 2 | 17 |
| 대산면 | 16 | 336 | 5 | 80 | 1 | 140 | 3 | 45 | 0 | 0 |
| 칠서면 | 55 | 1,651 | 4 | 158 | 8 | 151 | 12 | 246 | 5 | 128 |
| 칠북면 | 18 | 596 | 0 | 0 | 4 | 74 | 5 | 171 | 2 | 132 |
| 칠원면 | 120 | 2,104 | 8 | 190 | 20 | 245 | 33 | 632 | 17 | 294 |
| 산인면 | 36 | 933 | 0 | 0 | 6 | 69 | 13 | 305 | 4 | 277 |
| 여항면 | 2 | 33 | 0 | 0 | 0 | 0 | 0 | 0 | 0 | 0 |

자료: 전계서.

단지의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평당 50~60만원, 지원시설용지는 평당 60~70만원 선이다.

그러나 함안군의 농공단지의 규모는 매우 적어, 가야농공단지나 군북농공단지의 경우 2만평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농공단지 내 농민고용 규모가 미미하고, 젊은 인력이 없어 농공단지가 농촌소득 증대라는 당초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에서는 기업들의 농공단지 수요 증대로 인해 새로운 기계전문 농공단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2.3. 농산물 유통시설의 설립

함안군의 농산물 출하 경향을 작목별로 보면, 참외는 주산지인 가야읍과 산인면을 거점으로 가야농협 산지공판장에서, 수박은 주산지별로 농협공판장을 통해 경매로 중간상인을 통하여 전국에 출하된다. 또

표 3-5. 함안군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2004

| | 단지수 | 단 지 명 | 총 면 적 (1,000㎡) | 분양대상 면적 | 분양면적 | 입주 업체수 | 종업원 | | 생산액 (억원) |
|----|-----|--------------|-------------------|------------|---------|-----------|-------|-----|-------------|
| | | | | | | | | 현지인 | |
| 전체 | 6 | | 3,771.7 | 3,096.4 | 2,711.2 | 105 | 3,347 | | 1,132 |
| 가야 | 1 | 가야농공단지 | 78.2 | 61.8 | - | - | - | | - |
| 함안 | 1 | 파수농공단지 | 166.2 | 146.2 | 146.2 | 28 | 547 | 402 | 2,457 |
| 군북 | 1 | 군북농공단지 | 99.4 | 77.7 | 77.7 | 11 | 445 | 340 | 748 |
| 법수 | 1 | 법수농공단지 | 225.8 | 177.2 | 177.2 | 20 | 560 | 253 | 2,749 |
| 산인 | 1 | 산인농공단지 | 129.4 | 103.5 | 103.5 | 21 | 710 | 137 | 1,012 |
| 칠서 | 1 | 칠서지방산업 단지 | 3,072.7 | 2,530.0 | 2,206.6 | 25 | 1,085 | | |

주 1) 가야농공단지는 조성 중.

2) 칠서지방산업단지의 일부 통계는 미집계.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한 포도, 단감, 복숭아 등 과실류는 지역 농협 또는 개인농가가 직접 서울가락시장과 전국 각지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며,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것은 대신농협에서 수박을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것이다.

한편, 함안군에 공동 선별장, 간이집하장 등은 있으나, 시설채소 생산의 특성상 개별 농가 하우스 작업장에서 직접 선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별 등급의 미흡 문제 등으로 대형 유통업체 또는 백화점 등과의 직거래는 잘 이루지지 않고 있다. 함안군의 유통시설은 농협공판장 5개소, 농산물공동선별장 3개소, 간이집하장 19개소, 관내 농산물 직판장 4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 혁신을 위해 전

표 3-6. 함안군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현황

| 유통시설 | 개소수 | 운영주체 | 비 고 |
|--------------|------|--|---|
| 농산물공판장 | 5개소 | - 농협 | -정상운영: 3개소(가야.군북.대산) -미운영: 2개소(법수농협.삼칠농협 칠서지소) |
| RPC(미곡종합처리장) | 2개소 | - 군북농협 - 평화영농 | -정상운영 |
| 간이집하장 | 19개소 | - 작목반(9) - 농협(7) - 영농법인(3) | |
| 공동선별장 | 5개소 | - 농협(1) - 작목반(2) | -정상운영(가야수출농단, 칠북단감조합, 한솔영농법인) |
| 농산물직판장 | 4개소 | - 농협(1) - 단체(1) - 개인(1) - 영농법인(1) | -정상운영 군북농협 농업경영인회 |

자료: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함안 농업발전계획(안)』, 2004. 9.

국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이 확산되고 있으나, 함안에는 전무할 뿐 아니라, 농산물은 수확 후 선별, 포장규격화, 예냉 등 상품화 수준이 낮고, 브랜드화 수준도 낮은 편이다.

1.2.4. 금융, 유통 및 지역축제

가. 금융기관

함안군에는 많은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시 이 지역 내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1개소, 농협 2개소, 새마을금고 2개소 등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새마을금고 1개소를 제외한 4개 금융기관이 가야읍에 분포되어 있다. 2002년 당시 함안군의 새마을금고는 2개이며, 예금액은 139억 2,400억원, 대출액은 94억 3,700만원, 회원 수는 6,764명이다.

나. 시장

함안군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3-7. 함안군의 지역별 시장의 분포

단위: 개소, m²

| | 시장명 | 운영방식 | 면적 | 점포수 |
|-----|------|----------|--------|-----|
| 가 야 | 가야시장 | 상설, 정기시장 | 5,191 | 120 |
| | 아라시장 | 상설, 정기시장 | 2,075 | 67 |
| 군 북 | 군북시장 | 정기시장 | 3,558 | 75 |
| 대 산 | 대산시장 | 정기시장 | 3,424 | 50 |
| 칠 원 | 칠원시장 | 정기시장 | 3,766 | 40 |
| 전 체 | | | 18,014 | 352 |

자료: 함안군, 『함안군 통계연보』, 2003.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는 없는 실정이다. 함안군은 도로교통망의 발달과 함께, 인근 도시의 대형 백화점 설립으로 상거래의 도시집중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기존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안군민이 상시 이용해 왔던 재래시장은 농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그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가야시장은 1986년 5월에, 아라시장은 1984년 12월에 분양하여 민영화되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안군에서는 2002년에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야·대산시장에 차광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군북·칠원시장은 시장시설을 현대화하였으며, 가야시장 야간조명등 설치 등으로 외지이용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야읍 재래시장에서『함안 5일장 축제』를 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아갈 계획이다.

다. 관광 및 축제

함안군은 많은 문화재와 가야시대의 고적이 있고, 해안이 가까워 관광산업의 발달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함안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9점(보물 2점, 사적 3점, 천연기념물 3점, 중요민속문화재 1점)이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42점이 있다. 보물로는 함안대산리 석불, 방어산 마애불이 있고, 사적으로는 함안 성산산성, 도항리 고분군, 말산리 고분군 등이 있다.

함안군은 6세기 중반까지 아라가야가 지배하던 고장으로, 아라가야 시대 지배층의 무덤이 90여기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아라가야 역사를 볼 수 있는 함안박물관과 군민의 휴식 공간인 함주공원, 문화예술의 요람인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함안에는 아라가야를 기리기 위한 아라제가 민간의 아라제 제전위원

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산면의 수박 홍보를 위해 대산농협의 지원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산수박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 외에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도록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제와 농산물축제 등은 함안군이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1.3.1. 지역 내 기업지원

함안군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군청에서는 2003년에 65개 기업에 135억 2,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과, 43개 기업에 188억 9,700만원의 시설투자 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의 일부)을 지원하였다. 경영 안정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체 중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적이 없는 업체 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3억원까지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

표 3-8. 함안군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구 분 | 융자한도 | 금 리 | 상환조건 |
|---------|------|--------|----------------|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 연 5.9% | 3년 거치, 8년 균분상환 |
| 벤처기업자금 | 2억원 | 연 4.5%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소기업육성자금 | 3억원 | 연 5.9% | 3년 거치, 8년 균분상환 |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

를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 인허가업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역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비, 유희공장매입자금 등이다.

함안군은 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106개 사업장에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34,530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의 취업기회를 제공하였다. 경남도에서는 다른 지역 기업의 도내 산업단지 혹은 농공단지로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 지원 대상 기업: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또는 20명 이상 신규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급보조금의 종류
 - 입지보조금: 정상 분양가의 30%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신규 고용 20인초과 1인당 50만원
 - 훈련보조금: 20명 이상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 시 1인당 50만원
 - 시설보조금: 3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 이전보조금: 이전기업의 10억원 초과 이전시설가액의 1%
 - 본점이전보조금: 본점 이전 기업의 이동인원 10인 초과 1인당 30만원
 - 특별보조금: 500억원 이상 투자 시 또는 1일 상시 고용 30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특별지원 가능

1.3.2.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은 3D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에

⁴ 한 기업이 여러 업종에 종사할 경우, 그 중 제조업 생산활동 비중이 전체 사업활동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

차질을 빚고 있다. 함안군의 많은 기업체에서는 생산직을 원하고 있지만, 국내 인력들은 생산직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함안군청 내 지역경제과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군청에서는 생산직 부족업체에 공공근로 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지원한 후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사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매년 50명 내외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함안군에서는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전업희망 농업인 등으로, 공공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등에 훈련을 의뢰하여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입교 시부터 훈련 수료 후 최소 3개월 이상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등을 관리하여 매년 50명 정도를 취업시키고 있다.

1.3.3.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함안군에서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응성과 능력을 제고하고 위해 경영 개선자금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함안군은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 인

표 3-9. 함안군의 연도별 후계농업인 선정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계 | 1998년 이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인 원 | 726 | 612 | 49 | 37 | 17 | 11 |
| 지원액 | 13,880 | 9,315 | 1,300 | 1,110 | 1,730 | 425 |

자료: 함안군 내부자료.

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726명의 후계농업인을 선정하고, 138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후계농업인은 지역농업여건과 품목별 육성 대상자수, 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 간 균형 있게 선발하고 있다. 함안군은 농촌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고등학교 출신, 관련 분야 자격증소지자, 여성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1.3.4. 농산물 가공공장의 지원

함안군에서는 2003년 현재 5개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기업의 경영 형태는 모두 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농산물 가공공장의 고용규모를 보면, 상시직은 3명 내외이지만, 일용직은 50~200명이 대부분이고, 한 사업체는 800명인 경우도 있어, 업체당 평균 일용직 규모는 약 240명이다.

함안군 소재 농산물 가공공장의 시설부지 규모는 약 500평 정도이며, 가동실적은 1개 업체(120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일 정도이다. 이 공장들의 매출액 규모는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4억 2,500만원까지로, 평균 2억 2,700만원 정도이다. 지원된 농산물 가공공장의 업종은 메주, 참기름, 된장, 감식초 등의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업 및 활성염 제조업 등이다. 지원 형태는 보조와 융자인데,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보조규모는 총 3억 7,500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7,500만원이며, 국고융자는 총 2억 5,700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5,140만원이었다. 농산물 가공공장의 판매 방법은 대부분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제품의 대부분을 특정 종교단체나 회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1.3.5. 수출농단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

수출농단은 5호 이상의 농가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을 구성하여 대형하우스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별장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공동출하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함안군 지부가 이와 관련된 금융, 생산, 판매, 자재알선 등을 수행한다.

수출농단의 농산물은 외국과 관련된 정보가 많은 무역회사 혹은 바이어를 통해 수출되며, 대부분의 농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되나 점차 동남아로 수출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함안군에서는 면 단위로 판매사업단을 두고 수출했으나, 규모를 크게 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군 단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함안군에서는 수출농단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해외특판전 및 수출상담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와 바이어 상담 등 새로운 수출선을 확보하고, 우수 바이어

표 3-10. 함안군 수출농단의 현황

| 수출 농단명 | 참여 농가수 | 조성 년도 | 총사업비 (백만원)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담 | 주수출품목 | 수출액('02 ; 천달러) |
|-----------|-----------|----------|---------------|-----|-----|-----|-----|-----|---------|-------------------|
| 가야 | 9 | 1995 | 2670 | 426 | 392 | 561 | 712 | 579 | 파프리카 | 1,238 |
| 범수백산 | 11 | 1996 | 3023 | 426 | 355 | 687 | 909 | 646 | 파프리카 | 145 |
| 범수윤내 | 15 | 1997 | 2454 | 410 | 192 | 416 | 974 | 502 | 토마토, 멜론 | 66 |
| 군북동촌 | 16 | 1998 | 160 | 7 | 19 | 60 | 41 | 33 | 방울토마토 | - |
| 군북백이 | 24 | 1998 | 450 | 41 | 34 | 127 | 101 | 147 | 방울토마토 | 576 |
| 칠서구포 | 14 | 2000 | 197 | 7 | 37 | 64 | 0 | 89 | 오이 | 59 |
| 범수약양 | 11 | 2001 | 1381 | 307 | 133 | 145 | 300 | 526 | 오이, 장미 | 139 |

자료: 함안군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를 유치하여 수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함안군 농산물의 수출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해외시장개척 활동 강화로 수출선 확대: 3회
 - 유통공사주관 일본 시코쿠 꿀수박 특판전 참가: 24만 달러 계약
 - 농가, 농협, 의원 공동 해외정보수집 수출참여 기회 제공: 8명
 - 일본 동경 수출상담회 참가: 15개 업체 상담, 832만 달러 계약
- 신규 수출작물 발굴 수출 품목 확대: 14품목→18개 품목
- 수출 실적: 24만 6천 달러(거베라, 가지, 채소종묘, 관상조류)

1.3.6.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

함안군은 생산자조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하고 생산자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소유-민간위탁방식”의 산지유통센터(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 센터의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는 2개소, 1개소당 20억원 수준이며, 대상 지역은 가야권, 삼칠권이다.

가야권은 시설채소(참외, 수박, 토마토 등), 삼칠권은 과일(복숭아, 포도, 단감, 연근 등)을 각 작목반별 또는 개인농가에서 출하하던 것을 농

표 3-11. 함안군 산지유통센터 설치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설치 개소 | 투융자계획 | | | | 사업지구 |
|-------|---------------|-------|-------|--------|----------------|
| | 재원별 | 2006년 | 2008년 | 계 | |
| 2개소 | 국비 | 1,000 | 1,000 | 2,000 | -가야농협 -삼칠농협 |
| | 지방비 (도.군비) | 1,000 | 1,000 | 2,000 | |
| | 계 | 2,000 | 2,000 | 40,000 | |

주: 재원은 국비보조50%, 지방비50%(도25%, 군25%).

자료: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함안 농업발전계획(안)』, 2004. 9.

협에서 주도하기 위해 농협에서 연합판매단을 구성,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소규모 시설설치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연합, 공동마케팅조직, 생산자단체 컨소시엄 등에 적합한 20억원 이상의 중대형 규모의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1.3.7.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농어촌지원기금 지원사업은 농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에 융자금 을 지원하여 규모화, 기계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업 인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 향 상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융자지원 대 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내로, 법인, 생산자단체는 7억 원까지, 공동사업장은 3억원까지, 농어업인은 5천만원까지이다. 지원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경남도에서 이율 의 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표 3-12. 함안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계 | | 농어가 | | 단체, 조직 | | 중소기업체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994 | 20,994 | 976 | 17,555 | 12 | 1,328 | 5 | 2,111 |
| 1998년 이전 | 635 | 15,226 | 620 | 12,288 | 10 | 1,278 | 4 | 1,660 |
| 1999년 | 151 | 3,453 | 150 | 3,002 | | | 1 | 451 |
| 2000년 | 104 | 815 | 102 | 765 | 2 | 50 | | |
| 2001년 | 54 | 815 | 54 | 815 | | | | |
| 2002년 | 50 | 685 | 50 | 685 | | | | |

자료: 함안군, 『군정백서』, 2003.

함안군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994건에 209억 9,400만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그 중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액이 84%를 차지하였다. 함안군은 2002년에만 경남도로부터 6억 8,500만원을 배정받아 50개의 농가에 전액을 용자, 지원하였다.

1.4. 문제점

함안군은 창원, 마산 등 산업화도시의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산업도시의 혜택을 받는, 농업과 제조업이 잘 조화된 농촌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은 파프리카, 토마토 등에 특화시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기계 및 동 부품산업이라는 확실한 특화산업을 갖고 있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 제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제조업체가 지나치게 전통적인 기계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계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22명 정도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2002년 당시 지역 내 총 제조업체수 838개 중 단지입주 업체수는 133개에 불과하며,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개별 입지해 있다. 칠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착공한지 14년이 되도록 일부 분양대상면적이 미분양 상태로 있으며, 넓은 면적에 비해 입주업체수도 많지 않은 편이다.

둘째, 함안군은 농촌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이 농업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과 제조업의 복합산업화 정도가 낮은 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함안군은 지속적인 제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인구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값싼 부지와 배후도시 인접을 활용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공장이 많이 입지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복지 등 생활 여건 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구가 인근

의 도시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안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함안군 농산품 특성을 활용하여 농산품 가공공장의 육성 및 수출농단 활성화에 의한 복합산업화가 필요하다.

2. 산업낙후지역의 사례: 충북 영동군

2.1. 입지여건

충북 영동군은 충북 최남단에 위치하여, 생활권은 청주시보다 대전 광역시에 더 가까우며, 1개 읍, 10개 면으로 구성된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에 경북 상주시, 서쪽에 충남 금산군, 남쪽에 전북 무주군, 북쪽에 충북 옥천군 등 여러 지자체와 접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영동군의 주민등록인구는 54,036여명으로, 1995년의 62,966명에 비해 8년 동안 약 9천명 가까이 감소하였다. 영동읍에만 군 전체의 40%인 2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면 지역은 5천 명 이하가 대부분이다.

영동군은 대청댐 상수원 보호 등에 의해 환경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고, 임야면적이 전체의 77.7%로 산지가 많으며, 공장용지는 1.3%에 불과하다. 영동군은 옥천군으로부터 소백산맥이 분기되어 민주지산, 황악산 등 1천m가 넘는 산들이 4개나 되며, 600m 이상의 고봉도 다수이다. 그러나 소백산맥 준령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물한계곡, 양산팔경이 있어 도시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영동군은 서울로부터 212.4km, 부산으로부터는 232.1km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 영동역과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영동군이 충북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수도권 및 영호남의 교통 결절점으로서,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류 중계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동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주민의 46%가 농업에 종사하며, 포도, 감, 사과, 호두, 표고버섯 등이 전국 생산량의 6~10%를 차지하는 농특산물 생산지이다. 특히 포도는 군 단위로서는 전국 제일의 주산지로서,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종 개량으로 명품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아가고 있다.

2.2. 제조업 · 서비스업의 현황

2.2.1. 산업분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에 의할 경우, 영동군에는 2002년 당시 3,494개 사업체에 13,402명이 종사하고 있다. 영동군의 사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사업체가 2,880개로,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법인은 196개로 6%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회사 이외의 법인, 비법인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영동군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이 753개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 개인서비스업 489개, 제조업체 302개 등의 순이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읍면별 사업체 수 분포를 보면, 인구비중이 높은 영동읍과 용산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두 지역의 사업체 수

는 비교적 많지만, 4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85.1%를 차지하고 있다. 영동읍의 경우 50명 이상 종사자 수를 갖고 있는 사업체가 13개로, 군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3. 영동군의 산업별 사업체 형태

단위: 개, 명

| | 합계 | | 개인사업체 | | 회사법인 | | 기타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전 체 | 3,494 | 13,402 | 2,880 | 5,920 | 196 | 3,665 | 418 | 3,817 |
| 제조업 | 302 | 2,520 | 247 | 676 | 44 | 1,667 | 11 | 177 |
| 숙박, 음식점업 | 753 | 1,769 | 747 | 1,677 | 4 | 88 | 2 | 4 |
| 건설업 | 161 | 1,305 | 80 | 303 | 80 | 985 | 1 | 17 |
| 운수업 | 242 | 585 | 221 | 267 | 11 | 157 | 10 | 161 |
| 교육서비스업 | 129 | 1,152 | 75 | 154 | 5 | 53 | 49 | 945 |
| 개인서비스업 | 489 | 895 | 299 | 466 | 7 | 63 | 183 | 366 |

자료: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2003.

표 3-14. 영동군의 종사자 규모별, 읍면별 사업체 수 분포

단위: 개, 명

| | 합계 | | 1~4명 | | 5~9명 | | 10~19명 | | 20명 이상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전 체 | 3,494 | 13,402 | 3,030 | 5,153 | 227 | 1,449 | 132 | 1,859 | 105 | 4,941 |
| 영동읍 | 1,981 | 8,149 | 1,689 | 3,031 | 151 | 949 | 74 | 1,028 | 67 | 3,141 |
| 용산면 | 218 | 1,628 | 182 | 283 | 12 | 89 | 10 | 132 | 14 | 1,124 |
| 황간면 | 334 | 958 | 304 | 542 | 16 | 98 | 6 | 86 | 8 | 232 |
| 추풍령면 | 175 | 432 | 159 | 254 | 10 | 61 | 4 | 57 | 2 | 60 |
| 매곡면 | 84 | 242 | 74 | 112 | 5 | 36 | 4 | 58 | 1 | 36 |
| 상촌면 | 134 | 248 | 127 | 166 | 3 | 20 | 4 | 62 | 0 | 0 |
| 양강면 | 98 | 342 | 84 | 129 | 5 | 36 | 6 | 77 | 3 | 100 |
| 용화면 | 36 | 93 | 30 | 39 | 4 | 22 | 2 | 32 | 0 | 0 |
| 학산면 | 151 | 401 | 137 | 201 | 8 | 55 | 2 | 29 | 4 | 116 |
| 양산면 | 128 | 353 | 117 | 202 | 3 | 21 | 6 | 86 | 2 | 44 |
| 십천면 | 155 | 556 | 127 | 194 | 10 | 62 | 14 | 212 | 4 | 88 |

자료: 전계서.

영동군 소재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영동군 제조업체수는 영동읍에 127개로, 전체의 42%가 입지해 있으며, 종사자 수 비중은 26.6%이다. 용산면에는 44개 업체가 입지해 있으나, 대기업 중심이어서 종사자 수는 영동읍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도소매업은 영동읍이 업체 수 기준으로 60% 이상, 종사자 수 기준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광공업통계에 의할 경우, 영동군에는 2002년 당시 63개 제조업체가 분포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관련기업이 17개, 비금속광물 제조업이 12개이다.

표 3-15. 영동군의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분포

단위: 개, 명

| | 합계 | | 제조업 | | 도소매업 | | 숙박, 음식업 | | 개인서비스업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전 체 | 3,494 | 13,402 | 302 | 2,520 | 1,025 | 2,153 | 753 | 1,769 | 489 | 895 |
| 영동읍 | 1,981 | 8,149 | 127 | 672 | 635 | 1,556 | 427 | 1,017 | 234 | 492 |
| 용산면 | 218 | 1,628 | 44 | 1,188 | 56 | 80 | 37 | 84 | 33 | 37 |
| 황간면 | 334 | 958 | 34 | 134 | 83 | 147 | 77 | 240 | 55 | 105 |
| 추풍령면 | 175 | 432 | 15 | 69 | 30 | 50 | 51 | 96 | 28 | 34 |
| 매곡면 | 84 | 242 | 11 | 74 | 22 | 29 | 20 | 37 | 11 | 15 |
| 상촌면 | 134 | 248 | 10 | 13 | 41 | 49 | 31 | 52 | 20 | 28 |
| 양강면 | 98 | 342 | 13 | 105 | 32 | 65 | 6 | 13 | 19 | 31 |
| 용화면 | 36 | 93 | 5 | 8 | 13 | 15 | 2 | 3 | 8 | 10 |
| 학산면 | 151 | 401 | 12 | 65 | 43 | 60 | 29 | 47 | 28 | 37 |
| 양산면 | 128 | 353 | 7 | 13 | 38 | 53 | 42 | 101 | 17 | 61 |
| 심천면 | 155 | 556 | 24 | 179 | 32 | 49 | 31 | 79 | 36 | 45 |

자료: 전계서.

2.2.2. 농공단지의 조성

영동군에는 지방산업단지가 전무하며, 3개의 농공단지가 있지만 모두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전체 단지규모는 11만 9천 평 정도이다. 특히 영동농공단지는 2만평의 소규모 공단지이며, 영동군의 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총수는 20개에, 고용규모는 9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동군 농공단지의 현지주민의 고용비중은 약 80%에 가까워 농가소득 증대라는 농공단지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영동군의 농공단지는 3개이지만, 용산농공단지는 업체 수가 너무 적어서, 법화농공단지는 가동률이 낮아서 이 두 농공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으며, 오직 영동농공단지만이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다.

영동군 소재 농공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14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며, 입주업체는 21개 업체 중 조립금속이 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입주 형태를 보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이 4개, 분공장이 2개, 창업이 15개이다. 가장 늦게 조성 완료(1998년)된 법화농공단지는 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나, 2개는 건축 중, 2개는 휴폐업으로 인해 가동 업체 수는 4개뿐이다. 영동군은 농

표 3-16. 영동군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2004

| | 단지 수 | 단 지 명 | 총 면 적 | | | 입주 업체수 | 종업원수 (명) | 생산액 (억원) |
|-----|------|--------|----------|--------|-------|--------|----------|----------|
| | | | (1,000㎡) | 분양대상면적 | 분양면적 | | | |
| 전 체 | 3 | - | 456.8 | 392.5 | 392.5 | 21 | 1,063 | 698 |
| 영동읍 | 1 | 영동농공단지 | 70.8 | 57.7 | 57.7 | 10 | 278 | 189 |
| 용산면 | 2 | 용산농공단지 | 263.0 | 243.0 | 243.0 | 3 | 602 | 380 |
| | | 법화농공단지 | 123.0 | 92.0 | 92.0 | 8 | 183 | 129 |

자료: 영동군 내부자료.

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미분양은 없으며, 기 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영동군의 제조업체 수가 302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계획입지에 입주한 기업이 매우 적은 편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2.3.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

영동농협 산지유통센터는 1998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대지 2,082평, 건물 689평 규모로 10억 2천여 만원을 투입하여 설립하였다. 동 센터에는 농특산물 유통을 위한 상업시설, 유통시설, 부대시설 등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저온창고 300평, 집하선별장 354평, 비파괴당도선별기 1식, 중량선별기 2조 등이 있다.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은 포도, 배, 사과, 복숭아, 자두 등 17개 품목이며, 한해 매출액은 38억원, 총취급량은 1,917 톤에 달한다.

동 센터에서는 유통업체로부터 주문받아 전량 영동농협 산지유통센터 브랜드로 출하하는데, 출하 시기, 출하처 및 가격은 농협에서 전권을 갖고 결정한다. 또한 동 센터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영동농협이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심에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전국적인 거래망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거점거래업체를 정해 유통망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동 센터를 통해 영동군 및 반경 60km 이내 지역의 농산물을 집배송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내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개발지구 등을 연계하여 생산, 가공, 판매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동군은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출하되는 1차 생산

품과 2차 가공품을 집산하여 출하함으로써 중간마진을 최소화하고, 상품판매 이익이 농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동 센터는 무주, 진안, 장수 등 영동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산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득수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3년도에는 영동지역 포도의 명품화, 규모화 및 판매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동군 관내 4개 농협(영동, 학산, 황간, 심천)이 참여하는 포도 연합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영동농협에서는 인근의 옥천, 김천, 청송지역의 농협 농산물도 위탁받아 출하하고 있는데, 영동농협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했기 때문에 브랜드도 영동농협 브랜드로 출하된다. 그 결과 유통 물량이 커지고, 품목도 다양화되었으며, 출하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거두어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원활하게 되었다. 출하농협도 자체 출하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동군청에서는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영세 소농의 출하 편의를 돕고,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하며, 생산자의 조직화와 협동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 생산자 조직인 작목반 8개소에 4,800만원을 투자하였다.

표 3-17. 영동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설치수 | 사업비 | | | | |
|-------|-----|-----|----|----|----|----|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2002년 | 2개 | 12 | - | - | 10 | 2 |
| 2003년 | 6개 | 36 | - | - | 34 | 2 |

자료: 영동군 내부자료.

2.2.4. 금융, 유통 및 지역축제

가. 금융기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동군에는 제조업체가 빈약한 편인 데다, 2002년 당시 이 지역 내 금융기관도 시중은행 1개소, 농협 1개소, 축협 1개소, 새마을금고 3개소 등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새마을금고 2개소를 제외한 4개 금융기관이 영동읍에 분포되어 있다. 영동군의 3개 새마을금고의 예금총액은 263억 9,700만원이며, 대출액은 198억 1,300만원, 회원 수는 7,614명이다.

나. 시장

영동군은 정기시장 8개소 외에는 다른 형태의 시장이 없다. 부지 면적은 매곡시장이 가장 큰 편이지만, 점포는 황간시장에 가장 많이 입주해 있다.

표 3-18. 영동군의 지역별 시장의 분포

단위: 개소, m²

| 시 장 명 |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점포수 |
|-------|--------|-------|-----|
| 영동시장 | 1,624 | 281 | 28 |
| 용산시장 | 1,577 | 117 | 20 |
| 황간시장 | 1,590 | 154 | 40 |
| 추풍령시장 | 1,843 | 53 | 15 |
| 매곡시장 | 2,258 | 215 | 20 |
| 상촌시장 | 1,014 | 156 | 15 |
| 학산시장 | 1,475 | 444 | 11 |
| 심천시장 | 898 | 192 | 15 |
| 합 계 | 12,279 | 1,612 | 164 |

자료: 영동군, 『영동군 통계연보』, 2003.

다. 관광 및 축제

영동군에는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나 진입이 용이하고, 금강을 비롯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발전잠재력이 풍부하다. 특히 송림속의 송호국민관광지를 비롯하여 천태산, 물한계곡, 한천팔경을 이룬 월유봉, 옥계폭포 등은 영동군의 주요 관광지가 되고 있다.

영동군의 축제로는 난계국악축제가 유일한데, 이 축제는 이 고장 출신의 악성인 난계 박연의 위업을 계승, 보전하기 위해 매년 9-10월 경에 개최된다. 행사내용은 전국 난계국악 경연대회, 난계축제 축하공연, 국악학술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종합전시회 등 20여가지이다.

2000년 9월 영동군 심천면에 지상 2층, 연면적 230평 규모로 난계국악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여기에는 영상실, 국악기체험실, 국악기전시, 난계업적, 난계설화, 국악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영동 꾀감축제, 포도축제 등 과일축제를 품목별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그 중 꾀감축제는 군내 감연구회 주관하에 12월에 개최되며,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가 주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 과일이용 음식전시, 천연염료 이용 생산제품 전시, 농산 가공품류 전시, 과일모형 목각전시 등의 행사를 한다.

2.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영동군에서는 군청 기업지원과와 농정과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2.3.1. 지역 내 기업지원

영동군내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충청북도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군청이 군내 기업들에게 집행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충북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조성한 충북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일부이다. 영동군에서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매년 5억원씩 3년간 15억원 정도를 대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이자보전을 위해 매년 5천만원을 책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수준은 약 2~3% 정도이다. 영동군청에서는 개별기업들에게 지원내역을 통보해주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은 없다.

영동군에서는 충청도에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창업 및 경영 개선자금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출시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8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농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영동군내에는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통해 구인, 구직을 연계해 주고 있다.

표 3-19. 영동군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현황

단위: 개, 명

| 총계 | | 창업 | | 농공단지 | | 개별입지 | |
|-----|-------|-----|------|------|-------|------|-------|
| 업체수 | 종업원수 | 업체수 | 종업원수 | 업체수 | 종업원수 | 업체수 | 종업원수 |
| 132 | 2,466 | 33 | 378 | 21 | 1,021 | 78 | 1,067 |

자료: 영동군청 내부자료.

2.3.2. 농특산물 가공 및 특산단지를 통한 명품화 추진

영동군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인 포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과실류 가공업체의 경우, 매우 영세하여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제품의 경우 주로 전통식품으로서, 원료농산물이 국산이기 때문에 맛과 품질은 우수한 반면, 원료단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타제품보다 불리하다. 영동군 소재 많은 과실가공업체가 자금 부족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퇴출되고 있다.

영동군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전통식품 개발 및 산지가공공장을 2002년까지 12개 설치하였다. 이러한 농산물 활용 공장을 통해 원료농산물의 구입 및 가공처리가 가능해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 안정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와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유희 노동력 및 부존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일자리 제공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영동군에서는 2002년까지 38호가 참여, 2개의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11억 6천만원의 농외소득을 증대시켰다.

표 3-20. 영동군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사업량 | 사업비 | 재원별 | | |
|-----------|-----|-------|-------|-------|-------|
| | | | 보조 | 융자 | 자담 |
| 총 계 | 12 | 6,928 | 1,859 | 1,969 | 3,100 |
| 전통식품개발 | 8 | 3,232 | 685 | 1,146 | 1,401 |
| 산지 일반가공산업 | 4 | 3,696 | 1,174 | 823 | 1,699 |

자료: 영동군청 내부자료.

이와 함께 영동군에서는 다품종 고급 과실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품종 개량 및 집단재배단지 조성, 생산기반시설 및 유통시설 확충 등에 58억원을 투입하여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동군에서는 홍보 및 지역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군수, 읍면장, 관련 단체장 등이 대도시 도매시장을 방문하거나, 텔레비전방송 출연 등을 통해 영동군 과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영동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특별기획 전시판매, 자매결연처 직거래 판매, 연중 우편판매, 소비자 직판장 설치 등을 통한 직거래 판매액이 연간 160억원에 달한다.

그 외에도 영동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실현과 유기농법에 의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동군에서는 비 가림 재배시설을 확대하고, 농약 사용 횟수를 줄여 저공해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동군 농업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2.3.3. 포도산업 육성과 포도주공장에 대한 참여

영동군은 전국 포도생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칠레FTA타결로 타격이 예상되므로, 군 차원의 지원 및 포도제품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영동군의 포도생산은 연간 약

표 3-21. 영동군의 농촌특산단지 현황

| 단지명 | 소재지 | 지정연도 | 참여농가수 | 생산제품 |
|------|---------|------|-------|------|
| 해송실업 | 양강면 괴목리 | 1994 | 27 | 목욕용품 |
| 금진실업 | 양강면 괴목리 | 1993 | 11 | 자재단추 |
| 총 계 | 2 | | 38 | |

자료: 영동군청 내부자료.

35,000톤 정도를 생산해 최고 820억원, 최저 500억원 정도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다. 영동군에서는 연간 약 620 톤의 포도를 수매하여 가격을 지지해 주는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영동군은 감, 배, 꽃감 등이 많이 생산되어 2003년 “과일의 성지” 선포식을 갖고,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동군에서는 1994년부터 경영수익기금을 조성하여 제3섹터 형태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성,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모색하였다. 그 후 10년 동안 영동군은 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6월 말 22억 5천만원을 포도주 생산업체인 와인코리아(주)에 출자(48.9%)하였으며, 나머지는 와인코리아가 부담하기로 했다. 영동군은 동사의 포도주 생산라인 증설 등에 5억여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와인코리아는 1998년 영동의 포도생산농가들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샤토마니라는 순 국산브랜드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자본금은 영동군청의 출자로 46억여 원이 되었다.

2.3.4. 포도즙공장에 대한 지원

영동대학교에서는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주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벤처식품이라는 포도즙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영동군 용산면 울리에 9,327㎡ 규모로 1999년 9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15명을 고용하고 있다. 동사는 2004년 연간 300여 톤의 포도를 수매하여 약 6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동대학교내에 지역기술혁신센터(TIC)가 설립되어 동사에 대한 장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포도즙 추출을 위한 저온 열처리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동사는 1999년부터 6 차례 9억 7,6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동군에서는 지역 내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식용으로 포도즙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영동지역내 초중고생은 5천여명이며, 이중 3천명이 주 2회 정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

2.3.5. 늘머니과일랜드 조성계획

영동군에서는 영동읍 매천리 늘머니 일원에 부지 17만 3,157평, 건평 3천평 규모로 국비 76억, 도비 23억, 군비 91억, 민자 31억 등 총 221억원을 투입하여 늘머니과일랜드를 조성하고 있다(2003년-2006년). 이 계획은 영동군 과일을 알리기 위한 전시, 문화공간으로, 전국 제일의 포도주공장, 토굴저장시설과 연계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늘머니과일랜드는 영동군의 포도 등 과일, 일라이트 등 지하자원, 40개에 달하는 토굴 등을 활용하여 공익 중심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표 3-22. 영동대 (주)벤처식품 수혜 현황

단위: 백만원

| 순번 | 연도 | 지원기관 | 내역 | 금액 | 비 고 |
|----|------|----------|-----------|-----|----------------|
| 1 | 1999 | 충청북도 | 정책자금 | 100 | 3% |
| 2 | 2001 | 중소기업청 | 기술혁신개발자금 | 70 | 무상, 성공시 30% 반환 |
| 3 | 2001 | 영동군청 | 시설개선자금 | 40 | 6% |
| 4 | 2001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평가기금 | 300 | 7% |
| 5 | 2002 | 충청북도 | 정책자금 | 100 | 3% |
| 6 | 2004 | 중소기업청 | 기술혁신개발자금 | 66 | 무상, 성공시 30% 반환 |

자료: 영동대학교 내부자료.

2.3.6. 고용촉진훈련

영동군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인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세민들에게 자활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648만여 원을 들여 69명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취업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표 3-23. 늘머니과일랜드의 주요 시설물

| 구분 | 주요시설 | 세부 시설 및 기능 |
|-----------------------------|--|---|
| 테마시설 | 과일전시관, 전망대 | - 과일전시(역사관, 문화관, 품종관, 재배관) - 특산물 전시·판매 |
| 휴양·문화시설/ 연구시설(늘머니 센터) | 커뮤니티센터, 사우 나, 음식점, 연구관 (농업테크노피아) | - 군민 커뮤니티공간(문화행사장, 예술전 시관, 세미나장, 군민공익공간) - 생산 관련 기술연구공간 및 시설 - 특수 사우나(일라이트과즙) 및 건강시설 - 각종 먹을거리시설(판매시설 포함) |
| 특수 전시·판매 시설 | 도굴관 | - 와인·김치·젓갈 등 특산품의 저장· 판매 |
| 운동·위락시설 | 체육시설, 공연장 | - 조깅코스, 미니골프장, 테니스장, 게이트 볼장 - 야외공연장 시설 |
| 농원·공원시설 | 과일공원·농원, 광장 | - 진입광장, 과일터널, 과일숲, 농장, 산책로 |
| 숙박시설 | 숙박펜션 | - 펜션식 주거공간 - 농원,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 |
| 기타 | 녹지 및 공공시설 | - 녹지, 수로, 순환로 등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인업체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선하며, 구직자에게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해 주고 있다. 동 센터는 연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학생이 이 제도에 참가할 경우 월 30만원씩 6개월간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에서는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업체에게는 3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추가로 180만원을 채용사업주에게 지원해 준다.

2.4. 문제점

영동군은 농업과 접목된 농산물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내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이 없어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2년 당시 영동군은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기초통계상의 제조업체수는 302개나 되지만, 실제 사업장을 갖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63개에 불과하다.

결국 지역 내 고용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주요

표 3-24. 영동군의 고용촉진훈련 현황

단위: 천원, 명

| 구분 | 사업비 집행 | 훈련 위탁자 | 중도 포기 | 훈련 수료자 | 직종별 훈련 실시 상황 | | | |
|------|--------|--------|-------|--------|--------------|------|-----|----|
| | | | | | 사무관리 | 정보통신 | 서비스 | 기타 |
| 계 | 86,487 | 69 | 21 | 48 | 29 | 4 | 7 | 8 |
| 2000 | 51,106 | 46 | 13 | 33 | 26 | 2 | 4 | 1 |
| 2001 | 35,381 | 23 | 8 | 15 | 3 | 2 | 3 | 7 |

자료: 영동군청 내부자료.

업종도 음식료품이나 비금속광물 관련 기업 등 전후방연관효과가 낮고, 저부가가치업종 중심이어서 다른 기업의 연쇄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영동군에는 대규모 지방산업단지가 없고, 3개의 농공단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미분양면적이 없어, 추가적인 입주기업들은 개별입지에 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동군은 일라이트라는 부존자원과 포도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과일작물을 갖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포도의 경우 지역 내 영동대학교를 중심으로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라이트의 경우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고, 일부 제품도 아직 상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영동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산물가공업체와 영동대 바이오지역기술혁신센터 등과의 산합협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지식 기반산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지식 기반산업의 발굴은 영동뿐 아니라 산업발전이 낙후된 영동 주변의 보은, 옥천을 포함한 충북 남부 3개군이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3개 군은 주력업종, 입지 여건, 산업발전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식 기반 제조업체 및 관련 연구소의 입지에 대비하여 영동군내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을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지역산업 분산을 통한 도농 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 산업발전 및 집적 정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왜 이처럼 도농 간 산업발전 격차가 현격하게 되었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가에 관해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과 농공단지 조성과정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흐름을 개관하고, 낙후지역 개발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추진

1.1. 1960년대: 대도시 인근의 공업단지 개발

19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은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입지하였다. 이는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원료, 노동력, 전

기, 용수 등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정부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기반의 구축이었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성장을 통한 수출 확대와 비료, 석유, 시멘트 등 기간산업 투자를 통한 수입대체였다. 본격적인 공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것은 정부가 196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 「울산공업센터」를 지정하면서부터이다. 또한 1963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입지의 선정과 조성 및 지침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1964년에는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이 제정되어 1965년부터 구로와 인천의 주안과 부평에 6개의 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입지시키려는 계획입지 방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7년 이후에는 「조선공업진흥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등을 제정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추진되었다.

1960년대 공업배치정책의 특징은 대도시 주변 지역에 공업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는 인프라시설 관련 투자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집적을 통해 집적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공업지구의 적정배치 및 분산시책에 의해 1960년대에 지정·조성된 공업단지는 15개였다.

1.2. 1970년대: 거점 개발에 의한 대규모 공단의 조성

1960년대에는 대외 지향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공업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0년대

의 산업정책은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로 변경되었다.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1970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었으며, 1973년에는 이리수출자유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1973년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자력성장을 위한 중화학공업육성계획 및 관련 공단조성이 추진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 중 산업연관효과가 큰 철강, 기계, 조선, 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집중 투자되었다.

1.2.1. 지방공업개발법 제정

1970년에는 「지방공업개발법」이 제정되어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동 법을 근거로 삼아 공업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노동력 공급과 시장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공업장려지구로 지정하였다.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와 미포단지를 비롯하여 인천, 대전, 대구, 원주, 전주, 청주, 북평, 창원, 군산, 반월, 양산, 온산 등에 국가 또는 지방공업단지가 지정 및 조성되었다.

또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수립 및 제정(1972)되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이 공업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1975년에는 정부에 의해 조성된 공업단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 공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업단지관리법」이 제정되었다.

1.2.2. 공업배치법 제정

1977년에는 공업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

국적인 차원에서 공업입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19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공업부문간의 불균형 시정, 산업관련도 제고, 기술혁신이 목표로 설정되고, 대도시지역의 공업집중 억제와 지방 분산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동 법에서는 처음으로 공업의 분산 개념이 도입되어, 전국이 공업의 집적도에 따라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유치지역으로 구분된다.

1970년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로는 창원 기계공단, 마산 및 익산 수출자유지역, 울산석유화학공단, 옥포산업기지, 영등포 기계공단, 반월 공업단지, 군산 공업단지, 순천 공업단지, 포항 공업단지, 진주 상평공단, 칠서 공업단지 등이 있다. 또한 공업유치지역이 지정되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강릉·정주·나주 중소공단, 천안 공업단지, 여수 오천공단 외에 20여 개의 중소 공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조성되었다.

1.3. 1980년대: 수도권 집중억제 및 공단의 지방분산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거점개발 방식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인식하에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균형개발전략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 신평·장림공단, 광주 하남공단, 경기 향남공단, 충남 부용 및 조치원 공단, 경남 진해마천 주물공단 등이 지정·개발되었다. 그러나 공업용지가 다시 부족해진 1980년대 후반에는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대불공단, 녹산공단, 군장공단 등이 지정·개발되었다.

1980년대 초 공업의 지방 분산 및 균형개발정책은 『제2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공업배치시 지방의 기존공업을 고려하여 계열화 및 집적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5개 권역⁵으로 분리하여 공업배치제한을 통한 산업의 적정배치를 도모하였다.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대도시 기업의 지방유치를 도모하였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의 소득원개발을 촉진하는 농공단지의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1.4. 1990년대: 권역별 특성화

1.4.1. 관련법의 통폐합

1990년 들어 다기화되어 있던 공업입지 및 배치 관련 법률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통폐합되었다. 또 기존의 ‘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등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통폐합되었다.

관계부처(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간 공업입지 관련 법률의 통합 과정에서 단일법을 만드는 데 합의하지 못하고, 당시 상공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건설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⁵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존권역, 개발유도권역.

법률』을 각각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공부의 공업배치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용지수요자 중심의 공업배치정책과, 건설부에 의해 종전부터 추진되어 온 용지 공급자 중심의 산업입지정책이 공존하게 되었다.

1.4.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동 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전 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동 법에서는 수도권에서의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4.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

1982년에 제정되었던『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94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동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수도권에 과밀금부담제도와 총량규제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의 개정에 따라 일방적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기업이전 정책이 일부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수도권 입지가 용이해졌다.

1.4.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

1994년에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

어 지방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동 법은 지방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 광역개발계획의 수립, 복합단지개발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공업단지관리공단 등은 인력개발이나 지역협동연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기관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 법은 지역개발과 지방중소기업지원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1.4.5. 3·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전국이 7대 광역개발권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정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동서남해안을 따라 U자형의 아산만, 군산·장항, 광주·목포, 광양만, 부산, 대구, 포항, 대전 등 7개 광역개발권이 구분된다.

1999년에 제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1년 앞당기어 2000-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동 계획의 기본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지역간의 통합), 자연 속의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통합),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동북아지역과의 통합), 역동적인 통일국토(남북한의 통합)이다. 동 계획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별 수도 육성,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1.4.6.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10년마다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공업발전법」(1986년 제정)이 5년마다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발전법」(1999년 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지역 간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설립되는 중소기업 및 공장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시켰다. 특히 동 계획에 의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4대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추진되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9대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추진되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산업발전법」에서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 우대, 지역 특화산업 육성대책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정책도 대상 업종을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물류·연구개발·광고·엔지니어링·컨설팅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다.

1.5. 기존 산업입지정책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지역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첫째, 공업화 과정에서 대도시 및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입지했다는 점과, 둘째, 수도권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심지가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상술하면,

첫째,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이 혹은 전국 각 지역이 고루 성장하기보다는, 발전역량을 한 곳에 모아 특정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그 산업이 성장하기 유리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에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허쉬만(A. O. Hirshman)의 불균형 성장이론이나 페루(P.F. Perroux)의 성장거점이론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인 부문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끌어 왔다. 그 결과, 예컨대 포항 제철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입지한 울산과 같은 공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급속한 성장을 보여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서울이 경제를 비롯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중심지가 됨에 따라, 경기, 인천 등과 함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다른 지역, 특히 농촌과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수도권집중의 심화에 따라 수도권에 자리 잡으려는 공장을 제한하고, 일부 행정 기능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등 수도권의 기능분산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지역 간뿐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도 상존한다. 지역 불균형 심화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낙후지역 문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 낙후된다는 것은 발전된 지역에 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지표가 뒤지는 현상으로, 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불균형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구, 소득, 사회편의시설 등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혹은 편중되는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러한 지역불균형은 곧바로 그 밖의 지역의 낙후로 이어질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집행력과 의지가 미흡하여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우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식도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정책적 수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능력 강화, 지방에 대한 체계적 투자 등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에 산업입지와 산업기반시설의 집중적인 확충이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이 가지는 입지적 우위성은 더 많은 입지수요를 창출하게 되면서, 서울과 부산의 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편향적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한정된 토지자원으로 인해 계속되는 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용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불법 무등록공장의 양산과 기업의 과다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노정되었다. 반면 저개발지역인 호남권·충청권과 농촌지역은 공간적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과밀지역에서는 교통, 전력, 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추가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과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산업기반시설마저도 이용도가 낮아 시설의 유휴 또는 투자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2. 농공단지 조성정책의 추진

2.1. 근거법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업화정책으로 급속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도농 간 산업발전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8년 농가부업단지 육성사업 추진, 1973년 새마을공장 육성시책 추진, 1981년 농외소득개발기획단 설치 등 농촌공업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등을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농촌에 관한 본격적인 정책은 1984년부터 추진된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공단지의 조성은 농촌에 공장을 유치하고 농촌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1983년에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과 1984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법은 1990년 폐지되고 현재는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3조의2,⁶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농공단지 개발시에는

⁶ “시·도지사는 ---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 및 보조금·융자금의 소요내역, 3. 지정승인한 농공단지과 동일 시·군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농공단지안에 있는 공장의 입주·가동 및 고용실태” 등으로 규정함.

단지조성비와 공동 이용건축물 철거비 및 폐수처리장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공단지 개발 시에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대체조립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면제해 준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이 있다.

그동안 농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부지원은 여러 차례 수정·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수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공단지 개발 및 입주기업을 위한 융자 및 금융지원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들 개선조치의 기초는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2.2. 지역별 분포 현황

2002년 9월 현재 전국에는 299개 농공단지에 4,575만^m가 조성되어 3,50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농공단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남에 60개가 조성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지해 있고, 그다음이 경북 53개, 경남 46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대부분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입지해 있어, 충남이나 경북 등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된 경우에도 총고용 인원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농공단지가 입주대상으로 하는 표적업종은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농업생산물, 농촌 부존자원 등을 활용하는 농업 관련 제조업이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인력을 활용하는 가내형 및 공장형 제조업이다. 가내형 제조업은 민속공예품제조업 등을 들 수 있고, 공장형 제조업은 도시근교의 제조업체와 하도급관계를 갖고 있는 부품

업체들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는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앞으로 농공단지의 역할은 농업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농업생산물의 가공 등을 통해 지연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1. 지역별 농공단지의 분포현황

단위: 개, 천㎡, 명

| | 단지 개수 | 조성 면적 | 분양 대상 | 분양 면적 | 미분양 | 가동 업체수 | 휴업 체수 | 고용 인원 |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
|----|----------|----------|----------|----------|-------|-----------|----------|----------|----------------|
| 부산 | 1 | 249 | 189 | 189 | 0 | 22 | 0 | 2,090 | 95 |
| 대구 | 2 | 354 | 284 | 284 | 0 | 59 | 1 | 1,273 | 22 |
| 광주 | 1 | 324 | 269 | 269 | 0 | 40 | 2 | 1,569 | 39 |
| 울산 | 4 | 594 | 458 | 458 | 0 | 108 | 4 | 3,979 | 37 |
| 경기 | 1 | 117 | 96 | 96 | 0 | 4 | 0 | 355 | 89 |
| 강원 | 23 | 3,256 | 2,591 | 2,524 | 67 | 357 | 58 | 7,199 | 20 |
| 충북 | 38 | 4,872 | 4,023 | 4,009 | 14 | 308 | 32 | 12,563 | 41 |
| 충남 | 60 | 9,448 | 7,500 | 6,988 | 289 | 515 | 61 | 19,438 | 38 |
| 전북 | 32 | 4,843 | 3,911 | 3,583 | 328 | 383 | 64 | 9,831 | 26 |
| 전남 | 35 | 6,202 | 5,004 | 4,871 | 133 | 523 | 97 | 12,160 | 23 |
| 경북 | 53 | 8,791 | 6,888 | 6,574 | 314 | 655 | 78 | 20,944 | 32 |
| 경남 | 46 | 6,388 | 5,066 | 4,774 | 292 | 499 | 55 | 14,548 | 29 |
| 제주 | 3 | 312 | 241 | 235 | 6 | 34 | 10 | 426 | 13 |
| 전국 | 299 | 45,750 | 36,520 | 34,854 | 1,443 | 3,507 | 462 | 106,375 | 36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한국산업단지총람』, 2003. 4.

농업과 제조업의 결합은 농공단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농민 실업자는 재교육을 통해 농공단지에서 활용함으로써 농공단지 인력난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복합 산업화는 농공단지의 생산성 저하가 아닌, 상생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농공단지에 대한 정부의 개선 대책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 4개 부처가 2003년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통합 지침⁷⁾을 내놓았다. 이 지침에서는 4개 부처와 관련된 농공단지의 대상 지역 지정, 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분양 및 입주지원, 환경관리, 부실기업 관리 등 포괄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전업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공단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어민 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공업개발에 수반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는 기업들의 입주여건과 농촌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지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부실기업 지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대책위원

7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2003. 8.

회를 설치하고,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가동률 50% 미만인 기업들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을 대신하여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단지 내에 입주시켜, 농공단지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연수생 추천 시에도 우대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물품 납품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등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통해 기술지도나 판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기초지자체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3.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앞서 산업입지정책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은 과밀과 과소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 인적 자원,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빠지는 과소의 문제에 직면하는 등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압축적 근대화가 파생시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국가를 선진화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전략을 택하고 있다. 즉, 지방을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그동안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지방 분산의 국가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모델은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정체에 따라 안정적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성 도모 측면에서 많은 국가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 지역 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 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하에서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설정하였다. 즉, 지역 내 혁신주체 상호 간의 네트워크, 공동학습, 혁신의 창출 및 전파, 성과 향상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각 지역은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 전략에 기초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내생적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3.2.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추진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도하에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및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2003년 말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총괄편, 부문별계획, 시도별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총괄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부문별계획은 20개 중앙부처가 작성하며, 시도별 계획(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의 주도하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였다.

동 계획의 목적은 특별법 제1조에 나타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 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구현을 위해 각 지자체는 스스로 지역혁신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혁신 여건을 분석한 후, 지역혁신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혁신 발전 방안에서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력 확보·양성,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혁신주체의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혁신기반 확충 등이 제시되고 있다.

3.3.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전략·지연산업의 육성

3.3.1.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은 지방화의 흐름에 맞추어 지방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의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데 소홀한 점이 많았다. 그간 지역 관련 각종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추진됨에 따라, 자립형 지방화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기획능력의 발전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혁신을 통한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어서 혁신 여건의 조성과 혁신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쿡(Cooke)에 의하면 지역혁신체제는 “기업, 연구소, 대학, 혁신지원기관, 상공회의소, 은행, 정부부처 등이 기관에 체화된 제도적 환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상호학습(interactive learning)을 중시하는 체제(system)”로 정의하고 있다. EU에서는 RIS를 “지식발전과 기술 확산 등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업과 여러 기관⁸의 협력 및 교류관계”로 보고 있다.

효율적인 지역혁신 체제의 구축 등 혁신주도형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요소투입 주도의 성장정책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발전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혁신의 필요성, 혁신우수 사례의 전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혁신분위기의 확산은 국가균형발

⁸ 대학, 훈련조직, R&D연구소, 기술이전기관, 협회, 금융기관 등.

전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결국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요소투입 위주의 발전 전략과는 차별화된 기술과 인재가 성장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인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과 상호 연계를 중시하고 수도권 경쟁력 증진과 지방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참여적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서, 과거 하향식의 중앙집권적 정책과는 그 패러다임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과거의 SOC구축 중심의 정책과는 달리, 지역혁신에 초점을 두고, 특히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3.3.2. 클러스터와 전략·지연산업의 육성

이러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수단은 전략·지연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이다. 선진국에서는 지역 또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혁신클러스터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실리콘밸리, 울루, 도요타 등에서 보이는 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는 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산·학·연·관의 신뢰와 협력의 문화, 기업가 정신을 통한 기술·지식의 창출, 확산의 선순환 구조형성이 향후 국가와 지역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49%, 전체 수출의 72%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식 기반경제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는 범용·모방기술 중심의 대량생산시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생산의 분리, 제조업 중심의 획일적 입지공급, 산업입지와 교육·문화시설의

분리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2월 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기본계획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반영되었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는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으로 구분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4개 내외의 전략산업과 10개 내외의 지연산업을 선정하고, 각 산업별로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전략산업은 규모가 큰 제조업 위주의 선정인데 비해, 지연산업은 전략산업보다는 규모가 작 으면서, 각 지역의 특화 자원, 작물 등을 활용한 특성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계획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전략산업과 지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역산업이 효율적으로 육성되도록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역량과 추진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업을 각 지자체가 스스로 발굴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 계획은 지자체가 스스로 주력해야 할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동 계획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에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세부 사업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어, 다른 계획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전략산업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반해, 지연산업은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다. 특히 농촌지역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은 농촌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추진⁹

행정자치부는 지난 15년간 399개 오지 면을 비롯한 도서지역, 접경지역 등 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있으나, FTA 등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주로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낙후지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8-2002년 기간 중 인구 증감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2.6%증가 한 데 비해 오지개발 지구의 경우, 오히려 11.5%가 감소하였으며, 상하수도 보급률 등 기초생활 인프라시설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4년 7월 낙후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마련하였다. 신활력지역이란 산업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변화시켜 전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신활력지역정책은 도농 간 관계를 상생관계로 전환하고, 농산어촌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며,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융합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4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지표를 종합평가하였다. 그 결과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고시하고, 연간 2,000억원 내외의 재원을 3년 동안 집중 지원하여 낙후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지개발, 도서개발,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낙후지

⁹ 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2004, 198-206) 참조.

역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신활력지역 지원 대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즉, 3년마다 재선정 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정대상을 축소하며, 지정된 지역은 최대 3번까지만 지원토록 제한하고, 조기 졸업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농어촌 및 낙후지역 주민소득 수준을 도시가구 소득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의료·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정주공간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낙후지역 종합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군 단위로 낙후지역에 대한 중·장기 비전제시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별 개발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한 R&D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도서·오지·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통합 및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4-2.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선정 현황

| 강화군 | 용진군 | 태백시 |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강원) | 양양군 |
| 보은군 | 영동군 | 증평군 | 괴산군 | 단양군 | 금산군 | 부여군 |
| 청양군 | 남원시 | 김제시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나주시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 무안군 | 함평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상주시 |
| 문경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 고령군 | 성주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릉군 | 의령군 | 창녕군 |
| 고성군 (경남)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2004, 201).

제 5 장

지연산업의 현황 및 사례

1. 지연산업의 개념 및 특성

1.1. 개념

지연산업(地緣産業)¹⁰이란 각 지역특유의 자연자원, 문화자원, 농산물 및 축적된 지역특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연산업은 보통 전통산업에 속하며, 전략산업에 비해 산업의 규모가 작아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고용 및 소득창출, 정주체계 안정 달성 및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전략산업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정책의 범위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역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지연산업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며, 정책시행의 효과가 국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연산

¹⁰ 지역연고산업 혹은 향토산업이라고도 함.

업은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하기에는 다소 파급 효과가 적거나 중앙·광역지자체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산업이므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지연사업을 지원(地元)산업 혹은 지양(地陽)산업이라고도 하며, 지역마케팅(place marketing) 차원에서 특산물의 생산전략으로 연결하여 일촌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이나 마을활성화(町おこし 또는 村おこし)운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2. 특성 및 산업구성

지연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연산업은 전통적인 지역 특산품을 생산한다. 각 지역에는 오랜 전통의 지연산업과 관련된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지역의 경제적,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특산품을 생산한다.

둘째, 지연산업은 공급 체계가 지역성을 띠고 있다. 즉, 지연산업은 지역 내에서 산출되는 자원을 원료로 하여, 지역 내에 축적된 노동력, 기술, 자본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셋째, 지연산업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연산업은 특정 지역에 집적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며, 따라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넷째, 지연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규모가 적으며, 생산·판매가 전문화되지 못한 특성이 있어, 동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지연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고용과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생산비로 투입된 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된다. 또한 지연산업 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기술 등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하면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다.

여섯째, 지연산업은 그 지역 특유의 공예품이나 특산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지역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연산업은 그 지역에 대한 매력을 증대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지연산업을 SWOT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지연산업의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기회(Opportunity)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품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는바, 지연산업 제품은 이러한 선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 고용 및 소재조달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발생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당해 지역에 귀속됨 • 지연산업은 지역 특유의 공예품이나 특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및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축제 내지 이벤트가 활성화되고 있어 지연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개별 지역을 외부에 홍보하는 경우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지연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은 타 지역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문화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연산업의 성장여건 개선 |
| 약점(Weakness) | 위기(Threa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며, 가내 수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산업보다 경영 측면에서 열세 • 전문적인 시장 개척 및 홍보능력의 부족으로 시장이 당해 지역에 국한되는 수가 많음 • 첨단기술제품이 시장수요를 좌우하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제품의 부상에 따라 전통문화가 체화된 지연산업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예: 화문석) • 지연산업을 계승시키거나 관련 기술을 전수시킬 후계자 양성이 어려운 편임 • 지연산업은 전통성과 고유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수공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낮음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지방에서 육성 가능한 지연산업을 세분해 보면 2차·3차 산업 중 주로 전통산업에 속하는 산업이다<표 5-2>.

표 5-2. 지연산업의 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사례산업 |
|------------------------------------|--|---|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과실 및 채소가공업 수산물처리가공업 기타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 꽃감, 죽순통조림, 고추장 등 새우젓, 어리굴젓, 굴비 등 국산차, 산체가공 등 전통주 등 |
|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 제사 및 방직업 직조업 직물제품제조업 편조업 용단 및 자리제조업 끈 및 끈가공업제조업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 인견사 등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등 포대, 자수제품, 장식품 등 수편물, 편직양말 등 화문석, 대뚝자리 등 심지, 어망 등 한산모시, 안동포, 세포 등 가죽제조업 등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목재용기 및 등세공업제조업 기타 나무 및 톱크제품제조업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 | 목기, 등세공업, 죽제품 등 장식용 목제품 등 나전칠기, 등가구 등 |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한지, 수제지, 골판지, 벽지 등 |
|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옷칠, 의약품, 성냥, 광택제 등 |
|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칠화백자, 청자, 옹기, 토기 등 가정용 유리 제품 등 벽돌 기와 등 |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업 |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 날붙이, 수공구, 유기, 징 등 |
| 기타 제조업 |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 수정장신구 등 국악기 제조업 등 비, 술, 단추 등 |
| 서비스업 | 농산물 유통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환경 및 생태산업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5) 활용.

2. 지역별 지연산업 선정 현황과 육성방향

2.1. 지역별 지연산업 선정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지연산업을 각기 10개 이내로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 중심의 지연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산업화를 통해 지연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선정된 지연산업은 식품 관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관광, 문화, 농림어업 및 섬유산업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여기서는 동 계획에서 제시된 각 지자체의 지연산업 선정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¹

□ 서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2차산업 | 도심형 인쇄산업 | - 특수인쇄, 출판, 홍보물 제작 |
| 3차산업 | 문화·관광산업 | - 우수전통공예, 외국인관광, 컨벤션 |

¹¹ 동 계획의 분류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며, 동 계획에는 중분류와 소분류만 있음.

□ 부산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1차산업 | 지역특산농업 | - 미니토마토, 화훼부류 등 수출작물 |
| 2차산업 | 신발산업 | - 신발산업혁신 기반 구축,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 |
| 2차산업 | 해양바이오산업 | - 해양바이오 기술 개발, 산업화 |
| 2차+3차산업 | 섬유·패션업 | - 직물 제조, 직물디자인 |
| 1차+2차+3차산업 | 수산·가공산업 | - 수산물 가공, 유통 |
| 2차+3차산업 | 귀금속가공판매업 | - 귀금속 가공, 판매 |
| 3차산업 | 실버산업 | - 실버 서비스, 실버기기 제조 |
| 3차산업 | 선물금융산업 | - 선물금융 |

□ 대구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2차산업 | 기존전통산업 | - 안경, 출판인쇄, 귀금속가공 |
| 2차산업 | 지식기반제조업 | - 문화콘텐츠, 의료기기 |
| 3차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 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시컨벤션, 유통물류 |
| 3차산업 | 기타 | - 방재 |

□ 인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산업 | 수산업 | - 강화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
| 1차+2차산업 | 한방·약초 산업 | - 강화군 “인삼가공사업” - 강화군 “인삼명성되찾기 사업” - 강화군 “사자발 약썩 특산품화 사업” |
| 1차+2차산업 | 향토식품 산업 | - 강화군 “새우젓 명품화 추진 사업” - 강화군 “전통주류(인삼약주, 가시오가피주) 가공 사업” - 강화군 “순무 특산품화 사업” |
| 2차+3차산업 | 관광공예 산업 | - 강화군 “완초공예(화문석) 산업 육성 사업” - 서구 “세어도 종합개발 사업” |
| 2차산업 | 인쇄산업 | - 남구 “인쇄집적화를 통한 미추 프린팅 파크 조성사업” |

□ 광주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3차산업 | 김치산업 | - 매년 김치축제 및 국제행사 추진 - 광주전남 김치산업 활성화 |
| 1차+3차산업 | 화훼·원예 수출·레저단지 조성 | - 화훼 수출 증대 - 화훼 재배단지 집적 |
| 2차+3차산업 | 인쇄·출판업 | - 도심지역인 서남동에 집적 -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문화산업 육성 |
| 3차산업 | 황룡강 생태 관광산업 | - 도시하천인 황룡강의 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 3차산업 | 한복패션 산업 | - 광주시 충장로 5가 한복가공점 및 한복원단 판매점 집적 |
| 3차산업 | 전문특화 상업 거리 | - 건축자재거리, 부품 및 공구거리 등 활성화 |
| 3차산업 | 양동재래시장 문화거리 | -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상설시장 - 재래시장 쇠퇴로 활성화방안 강구 시급 |

□ 대전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2차산업 | 조립금속·기계 산업 | - 지역 대표 제조업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
| 2차+3차산업 | 영상·게임산업 | - 디지털 영상시설 집적화, 문화산업 기반 조성 |
| 2차+3차산업 | 관광공예산업 | - 관광공예산업 육성 - 대전 대표 브랜드화 촉진 |
| 3차산업 | 웰빙산업 | - 기능성 관련, 문화·휴양·레저 관련 섬유·패션 산업 육성 - 새로운 고용 창출 실버벤처 지원, 네트워크 형성 |
| 3차산업 | 축산·향토산업 | - 향토상품 개발, 판촉활동 |
| 3차산업 | 건설산업 | - 신행정수도 건설지원을 위한 지역 건설역량 강화 |

□ 울산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산업 | 농·축산 | - 언양·봉계 한우, 울주 배, 울주 친환경쌀, 서생 난, 울주 방울 토마토 |
| 3차산업 | 관광 | -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동해 해양관광, 현대자동차·중공업 산업관광 |

□ 경기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2차+3차산업 | 슬로우푸드 (Slow Food) | - 사라져 가는 전통식품·안전한 먹을거리를 관광자원화 - 슬로우푸드 마을 조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 1차산업 | 선택형 맞춤형 농업 | -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농업·그린농업·정보농업 실현 - 농산물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및 낙후지역개발 |
| 2차산업 | 경기북부섬유 산업 | - 섬유지원센터 건립 - 경기 북부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 조성 |
| 2차산업 | 경기북부가구 산업 | - 가구산업연구센터 - 경기 동·북부지역 가구업체의 디자인·혁신지원 |
| 3차산업 |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세계적 가치 - 선사문화유적의 복원·보존 및 문화 인프라 개선 |
| 3차산업 | 양주회암사지 종합개발 | - 조선왕조의 국보사찰로 단일지역으로 최대 문화재 발굴 - 회암사지 종합개발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 3차산업 | 수동관광지 종합개발 | - 몽골문화테마파크 등 기존 관광지와는 다른 특성화 개발 |
| 3차산업 | 도라산평화 공원조성 | - 서울-과주-개성을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평화상징공간 조성 - 경기북부 안보체험 관광 인프라 개선 |
| 3차산업 | 경기 동북부 지역특화사업 | - 지방산업단지, 관광테마형 단지,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 역세권 개발, 지역별 특화사업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예 : 연천 선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안보문화관광벨트 등 |
| 3차산업 | 산정호수종합 개발 및 정비 | - 주5일제 도입등 관광여건 변화에 대비 - 경기 관광 인프라 조성 및 북부 지역 개발에 기여 |
| 2차+3차 산업 | 도자문화클러스터 | - 여주·이천·광주 지역의 도자산업 육성 - 도자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 |

□ 강원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
| 1차산업 | 식물자원산업 | - 전통식물산업과 신규자원산업을 포괄 |
| 1차산업 | 동물자원산업 | - 가축과 야생동물, 낙농업, 곤충류 등 부문을 포괄 |
| 1차산업 | 어류자원산업 | - 전통 수산업과 함께 산천어, 지역 특화어류 등 |
| 1차+2차 산업 | 향토식품산업 | - 전통명주(銘酒), 닭갈비, 젓갈 등 지역특화식품 |
| 2차+3차 산업 | 목재·건강 자재산업 | - 목재가공 및 건강자재의 개발, 산업화 - 생명건강 이미지 추구 |
| 2차+3차 산업 | 한방·약초 산업 | - 강원도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휴양과 치료를 병행 하는 한방 및 대체의학 산업을 육성 |
| 3차산업 | 환경·산소 산업 | - 휴양산업, 건강주택 등 연계 |
| 3차산업 | 관광공예산업 | - 메이드인 강원제품 개발 |
| 3차산업 | 그린투어리즘·축제·회의산업 | - 농산어촌 체험, 축제, 회의 및 연수 등 산업화 |
| 3차산업 | 실버산업 | - 실버타운, 실버 서비스 등 |

□ 충북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사업 |
|------|------------|--|
| 1차산업 | 농·임·광물자원활용 | - 석회석 신소재 특화단지 조성 -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 - 옥천묘목산업 육성 |
| 2차산업 | 벤처·기업지원 | - 충북바이오농업종합지원센터 - e러닝 산업단지 조성: 인터넷을 통한 컨설팅, 콘텐츠 특화 -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 벤처기업, 연구소 등의 복합단지화 |
| 3차산업 | 건강·생태 | - 에코세라피 건강산업 |
| 3차산업 | 문화 | -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 보은 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 |
| 3차산업 | 관광 | - 초정광천휴양관광지 조성 |

□ 충남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산업 | 신선딸기산업 | - 농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
| 1차산업 | 해나루 쌀 | - 기능성 쌀 생산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 1차+3차산업 | 광천 토굴새우젓 |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및 재래시장 활성화 |
| 1차+3차산업 | 사과가공·유통 | - 사과생산, 가공유통 활성화 |
| 2차산업 | 자카드섬유산업 | - 자카드직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1차+3차산업 | 실버산업 | - 인삼산업과 연계한 고급형 실버산업 육성 |
| 2차+3차산업 | 머드산업 | - 지역축제 활성화 및 머드화장품 국제브랜드화 |
| 3차산업 | 군 문화엑스포 | - 3군사령부와 연계한 국제적인 군문화 축제 활성화 |
| 3차산업 | 칠갑산그린투어 | - 친환경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
| 3차산업 | 농촌테마관광 | - 친환경 농촌테마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

□ 전북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 사업 |
|------------|-----------|--------------------------------|
| 2차산업 | 귀금속·보석 산업 | - 익산시의 귀금속·보석 특화단지의 육성 |
| 2차산업 | 니트산업 | - 익산시와 전주시의 니트산업 고부가가치화 |
| 2차산업 | 울칠산업 | - 남원시의 칠기공예산업 육성 |
| 1차+2차산업 | 유가공산업 | - 임실군의 치즈산업 중심의 유가공제품 및 축산업 육성 |
| 1차+2차산업 | 복분자산업 | - 고창군의 복분자 농업 및 가공산업 육성 |
| 1차+2차산업 | 장류산업 | - 순창군의 고추장, 된장 등 장류산업 특화 육성 |
| 1차+2차산업 | 한우산업 | - 장수군의 한우농업 및 한우가공산업 육성 |
| 1차+2차산업 | 파프리카산업 | - 김제시의 파프리카 재배농업 및 가공산업 육성 |
| 1차+2차+3차산업 | 허브산업 | - 남원시의 허브농업 및 가공산업 육성과 관광자원화 |
| 1차+2차+3차산업 | 젓갈산업 | - 부안군의 젓갈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화 |

□ 전남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산업 | 버섯산업 | - 종균 연구, 가공기술 강화 버섯 경쟁력 제고 |
| 1차산업 | 전통애견산업 | - 진돗개의 세계명견화사업 추진 |
| 1차+2차산업 | 토종약초생산 가공업 | - 토종약초에 대한 성분분석과 신물질 개발 |
| 1차+2차산업 | 기능성 식품 산업 | - 지역의 특산물인 대나무, 매실, 연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특화식품개발 |
| 1차+2차산업 | 녹차산업 | - 차생산기반시설 확충 : 차의 생산과 가공, 유통 - 차 연구개발 강화 :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 |
| 1차+2차산업 | 돌산갓산업 | - 돌산갓의 가공상품개발, 수출전략품목 육성, 포장유통 물류, 홍보이벤트 개발 : 지역고유의 상품개발 |
| 1차+3차산업 | 굴비와 천일 염 산업 | - 영광굴비와 천일염의 명품·대중화 - 수산물 쇼핑몰 구축 |
| 1차+3차산업 | 고려상감청자 특화산업 | - 전통 도예문화의 보존과 계승화 |
| 1차+2차+3차 산업 | 천연염색과 나비디자인 | - 쪽, 고구마, 황토 등 천연자원 이용 염색문화산업 클러 스터 조성 - 디자인개발로 응용상품화 |
| 1차+2차산업 | 부각산업 | - 부각산업 연구개발로 신상품 개발, 공동수출기반 마련 |

□ 경북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산업 | 화훼산업 | - 낙동강연안 화훼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수출산업화 |
| 1차+2차산업 | 농산물가공, 시설채소산업 | - 지역 특산 농산물 및 시설채소의 고부가가치화 |
| 1차+2차산업 | 수산물가공, 해양산업 | - 포항 과메기, 영덕 대게 등 지역 수산물 가공산업 및 해양산업 육성 |
| 1차+2차산업 | 포도가공산업 | - 영천·김천의 포도가공산업 및 봉화 산머루산업 육성 |
| 1차+2차산업 | 마늘가공산업 | - 의성 마늘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2차산업 | 섬유기계산업 | - 구미, 경산, 성주 중심의 섬유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2차산업 | 전통직물산업 | - 안동포산업, 풍기인견직산업 등 전통직물산업 육성 |
| 2차산업 | 한방산업 | -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한방산업 기반 구축 |
| 1차+2차산업 | 인삼가공산업 | - 인삼효능체험을 통한 인삼판로 확대 |
| 3차산업 |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 - 지역 관광권 활성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 관광산업 기반 조성 |

□ 경남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2차산업 | 생산, 가공산업 | - Silk 산업 - 석재가공산업 |
| 2차산업 | 향토식품산업 | - 『하동녹차』 가공산업 -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 김치가공산업 |
| 3차산업 | 유통산업 | - 축산사료유통산업 |
| 3차산업 | 문화산업 | - 경남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조성 - e-Sports 산업 - 국제연극도시 육성 - 애니메트로닉스산업 |

□ 제주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주요사업 |
|------|---------|--|
| 1차산업 | 축산업 | - 고품질·청정 축산물 생산 잠재력을 활용하여 양돈·마필·한우산업 육성 |
| 1차산업 | 수산업 | - 청정 양식업 육성 및 자율관리어업 정착 |
| 1차산업 | 화훼산업 | - 수출 주력품목인 양란·백합·국화·호접란 등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 2차산업 | 기념품산업 | - 디자인 통합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산업별 제주 명품 개발 |
| 3차산업 | 스포츠산업 | - 국내·외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골프산업 육성 |
| 3차산업 | 향토음식산업 | -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1차산업과 관광산업 연계 육성 |
| 3차산업 | 청정에너지산업 | - 풍력발전단지 확대하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도 전역을 Green Village로 조성 |

2.2. 지연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정부의 지역산업 지원은 전략산업 중심이었으나, 향후 지연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역특유의 농산 자원을 활용한 지연산업에 대해서는 종합 지원 센터 설립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산업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인적·물적 자원 및 혁신역량을 기초로 삼아 지역 주민 등 민간의 참여와 자발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연산업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일부로서 혹은 보완산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 전략산업과 연계한 육성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옥천군이나 영동군이 농업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경우,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산업은 자원, 특산품, 전략산업과의 유관업종 등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연산업은 각 지역별 지연산업 발전 수준, 사업화 가능성, 확보 가능 예산, 지자체의 의지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연산업 중에는 이미 사업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시장원리에 맡겨도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화 가능성은 있으나 예산과 홍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지역 및 산업실정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연산업 육성시에는 지자체 간 일률적인 배분방식보다는 지자체 간의 경쟁 원리에 입각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2.1. 지역적 특화개발 촉진

각 지역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 지역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인력과 기술 및 자원 측면에서의 경쟁적 우

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요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지연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연산업이 농촌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의 주요 창출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주체제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연산업 특성 및 추진사업에 부합하는 해당 지역 내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지연산업 분야의 지식과 기술정보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특성화된 연구개발 내지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지연산업은 지역 특성 강화와 함께, 특화품목의 다변화와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즉, 지연산업의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제품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연산업의 제품가치 증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2.2.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무한경쟁의 지식 기반사회에서 지연산업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도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지연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지식 기반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첨단화 및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의 잠재력과 향후 혁신 내지 발전전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연산업에 대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산학연관 연계에 의한 지연산업 분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며, 지연산업 분야의 벤처창업 촉진, 국내외 수출 및 수요 증대를 위한 종합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망라하는 공동 브랜드의 개발과 마케팅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충북 영동군의 자원활용형 지연산업 사례

3.1. 자원부존형 지연산업 육성의 필요성

충북 영동지역은 수백만 톤의 일라이트가 맥상으로 대량 매장된 유일한 지역으로, 제조업이 취약한 이 지역에 일라이트를 활용한 지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라이트는 영동군 산익리 일대 폭 400m, 길이 17km 맥상에 5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¹²

운모의 일종인 일라이트(illite)는 국내에서는 희귀한 광물로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수한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일라이트는 환경 및 건강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라이트의 효능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등의 부재로 시장 규모는 협소한 편이다. 일라이트의 활용 분야 및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라이트는 이러한 활용 분야 외에도 광물학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차세대 성장산업 중 하나인 신소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북은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신소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소재의 하나로 활용 가능한 일라이트는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과 수요처 개발, 그리고 신소재 개발을 통한 최종재로서의 용도 다양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¹² 광업권: 동창산업사 1,523ha, 덕암산업사 346ha.

일라이트는 일반적인 용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 및 신소재를 위한 용도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의 광산업계가 대부분 영세하므로,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R&D지원, 시설 및 기술개선 자금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의 생산, 가공, 판매 등 기업 활동을 한 곳에 집중시켜 특화지구로 집중 육성할 경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일라이트를 통해 제품을 개발할 경우, 안정적 판로 확보가 요소이므로, 건강특화지구 조성을 통해 개발제품의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표 5-3. 일라이트의 활용 분야 및 효과

| 활용 분야 | 효 과 |
|-------|--|
| 도양분야 | 도양의 중금속 흡착특성과 음이온 발생 및 원적외선 방사기능으로 인해 산성화된 도양을 중화시켜 식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며, 성장을 촉진 |
| 사료분야 | 양축류의 체내에서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원적외선 방사와 산소발생 등의 기능으로 체내를 정화, 정균하고 백혈구를 증가시켜 면역성을 강화 |
| 정수분야 | 물분자를 활성화시키고 용존산소량을 증가시켜, 물의 자정능력 강화 |
| 폐수분야 | 흡착, 분해, 탈취의 3대 작용으로 폐수에 유입되어 있는 각종 중금속을 정화시키며, 사용 후 발생하는 슬러지도 도양 등에 재활용 가능 |
| 건축분야 | 일라이트 건축마감제는 우리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93%까지 방사하여 유해 파장을 차단하고, 수백차단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 |
| 공기분야 | 대기 중의 담배연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및 각종 유해물질을 일라이트의 음이온 발생으로 경화 침전시켜 제거 |

자료: 산업연구원, 『충북 산업발전 비전21』, 2003. 12.

일라이트를 소재로 한 건강특화지구 조성은 현대인의 건강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다양한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개발된 제품의 소비시장 확충 및 홍보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충북의 21세기 전략산업인 IT, BT산업과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기술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이 용이하다. 영동군은 일라이트를 제품화함으로써 Clean & Green이라는 충북 남부권역의 이미지와 더불어 Health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2. 육성의 기본방향

영동군은 일라이트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일라이트를 활용한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을 집적시켜 “일라이트 건강특화지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구지정은 산업복합화와 일라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창출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영동군은 일라이트를 활용한 건강형 체험·관광상품의 개발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라이트 관련 제품의 생산기반 확충, 전국적 수요 기반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라이트 생산기반 확충은 지역 내 고용 및 소득창출로 이어져 권역 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일라이트 건강특화지구 조성은 2차산업과 3차산업이 결합되어, 2차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3차산업을 병행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다. 또한 동사업과 관련하여 테마형 건강체험 관광 상품의 개발은 지역 내 관광객

의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동 사업은 지역 내 관광객의 증가를 통해 제품의 소비기반 강화로 이어져 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일라이트 건강특화지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차별화 및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관련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건강특구의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제품 생산업체와의 공동R&D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일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광물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테마형 건강체험상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업은 충북 남부 3개 군의 취약한 산업기반 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라이트 건강특화지구는 현재 개발된 제품과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건강특화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라이트를 이용한 과일, 청정야채, 기능성 쌀, 황토포크 등 농·축산물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일반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라이트 가공상품인 미용비누, 의료용 건강기구, 일라이트 건축자재를 사용한 체험가옥 등의 체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일라이트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으나, 관광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집적시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일라이트 광산 견학 → 일라이트 건강욕 또는 일라이트 삼림욕 → 일라이트로 재배한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사 → 일라이트 체험가옥에서 휴식 → 일라이트 상품 쇼핑 등과 같은 테마별 패키지화가 필요하다.

3.3.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

일라이트 건강특화지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영동군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해당 사업체, 기술지원 대학 등 지역사회 구성원 간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접한 충북 남부 3개 군의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한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건강특화 지구내에서는 일라이트 관련 시설의 현대화 및 집적화를 통해 일라이트 건강테마파크를 건설하여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지구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소수이고 노후화되었을 경우, 일라이트 건축재료를 활용한 현대식 체험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일라이트 관련 기술 개발은 지역대학과의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영동대학교에서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일라이트의 고부가가치 사업화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라이트 건강특화지구는 충북 남부권의 청정 환경을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소득창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라이트의 활용도를 다양화하고 환경 및 인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의 정비로 지역 내 관광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일라이트 관련 제품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으로, 관련 사업체의 성장환경 조성과 지역 내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에 기여

할 수 있다. 일라이트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시설정비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동 사업을 통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은 지역소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영동군의 취약한 산업구조 및 기술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기업에 제공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1. 농촌지역 산업낙후의 원인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연구소, 대학의 관련 학과, 지원기관 등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은 생산 여건뿐 아니라 산업연구 및 지원 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어떤 지역에 특수한 자원,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기관이 존재하거나, 공통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역 내 기업특유의 역량으로 체화되고, 이런 요소가 지역비교우위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비교우위의 확보를 통해 도시지역과의 산업발전 격차를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5장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농촌지역의 산업

¹³ 여기서 제시하는 산업낙후 원인은 다른 협동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농업 분야나 생활환경 및 SOC 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측면에 국한함.

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농촌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1.1. 이론모델에 의한 낙후발생 원인

지역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투입이 증가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 투입 시 가장 크게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기술이 체화될 수 있는 산업은 제조업, 특히 지식 기반제조업이며, 지식 기반제조업의 발전은 그 지역으로 지식 기반서비스업의 유입을 초래할 것이다.

칼도(Kaldo)의 누적적 인과관계론에 의할 경우, 대학, 연구소, 대기업, 지원기관 등이 입지해 있는 도시지역은 기술축적이 용이하고, 이에 따라 지식 기반제조업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달성된 지역산업 성장은 새로운 기술지식과 다시 피드백됨으로써 이노베이션이 촉진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은 내생적으로 지식이 체화되어, 지식이 체화되지 못한 농촌지역과의 기술격차, 나아가 성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불완전 확산모델에 의할 경우, 성장의 중심지 혹은 그 인접지역이 성장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혁신발생 주변지역이 발전된 지역이라면 계층구조모델에 의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혁신성과가 확산될 것이지만, 혁신발생 주변지역이 낙후지역이라면 공간확산모델에서와 같이 혁신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은 혁신의 성과 내지는 혜택을 적게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칼도의 누적적 인과관계론은 기술지식의 내생성에 의해 혁신발생지역내에서 성장과 피드백될 것이며, 공간확산모델에 의할 경우도

혁신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까지 혁신성과가 파급되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지베르트的主張처럼 지역 간 지식 이동을 촉진하는 지식 전달자, 지식 채택자, 지식 교류체계 등이 부족한 우리나라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지식파급은 느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제조업 분야의 지식·기술격차가 성장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지역별 노동생산성과 성장간의 관계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 전체에 걸쳐 수렴해 왔는지, 아니면 더욱 확대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연도의 전국 1인당 불변GRDP를 우리나라의 평균으로 보고, 16개 시도의 1인당 불변GRDP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줌으로써 즉, 표준편차계수로 소득격차를 측정하였다.¹⁴ 그 중 16개 시도의 1인당 GRDP의 표준편차계수를 보면 1990년에 $(14.1/58.0)=0.24$ 이었으나, 2002년에는 $(40.4/106.5)=0.38$ 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런 방식을 불변부가가치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에도 적용하면, 1990년 당시 16개 시도 노동생산성의 표준편차계수를 보면 $(9.29/32.8)=0.28$ 이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동 지표가 $(38.35/90.54)=0.42$ 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 기간은 각 지역의 노동생산성이나 소득격차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이나 1인당 불변GRDP가 높은 상위 4개 지자체와 나머지 12개 하위 지자체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대상 기간 상위 4대 지자체의 비중이 높아졌는지를 살펴보았다<그림 6-2>. 우선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보면 1990년 당시 상위 그룹 비중은 35.4%이었으나, 1997년에 큰 폭으로 격차가 확대되어 2002년에는 39.0%에 이르고 있다. 또한 1인당 불변 GRDP의 경우도 1990년 당시 상위 그룹 비중은 33.3%이었으나, 2002년에는 36.4%로 높아졌다.

¹⁴ Wolff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렴 여부를 측정(p.187).

그림 6-1. 1인당 GRDP와 지역노동생산성의 표준편차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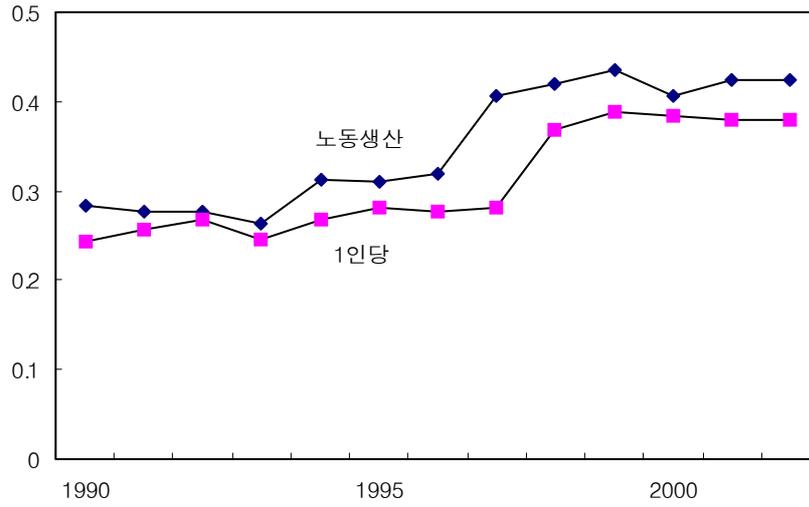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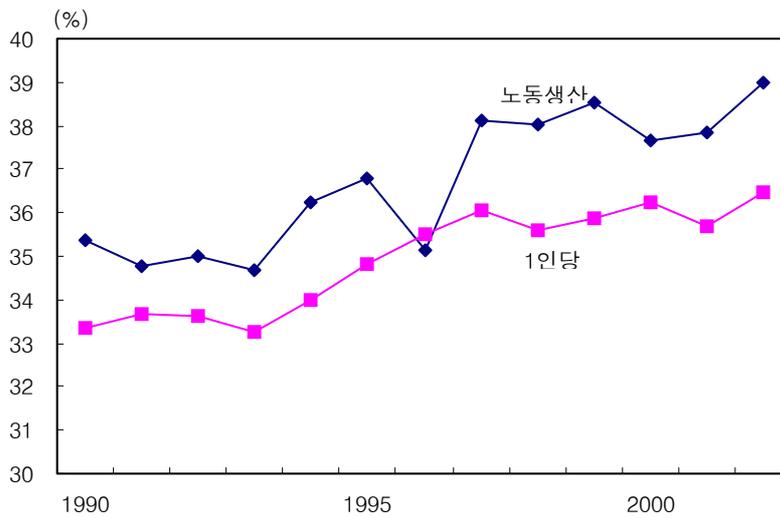


그림 6-2. 상위 지자체의 1인당 GRDP 및 노동생산성 비중 추이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가 누적적 인과관계모델에서와 같이 성장하는 지역은 더욱 성장하고 있고, 발전된 지역으로부터 낙후된 지역으로의 지식 파급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실은 신고전파모델처럼 지식의 즉시 확산에 의한 소득격차 수렴 현상이 자동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전이 뒤진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의 흡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혁신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⁵

1.2. 산업구조 및 업종분포에 의한 낙후발생 원인

농촌과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및 제조업 내 업종분포가 처음부터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가가치산업이 집적된 도시지역으로 가속적인 기업유입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지식 기반제조업과 지식 기반서비스업이 도시에 입지해 있어, 이들 기업과의 거래 내지는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도 도시에 입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2장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 특화형 제조업은 소비재 중심의 도시형업종과 컴퓨터·사무기기 등 지식 기반제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영상·음향·통신장비산업도 점차 도시특화산업으로 바뀌고 있으며, 농촌특화산업은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등 도시 특화형 산업에 비해 저부가가치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생산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에 의한 시군구 유형 구분은

¹⁵ 예컨대 농촌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등을 들 수 있음.

시도한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높고, 인구 증가율도 높은 I 그룹에 속한 24개 지역 중 19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된 경우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지역의 특화산업이 과거 전국의 해당 주력 산업의 성장성이 낮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집중된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공업처럼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저부가가치산업인 경우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에 더욱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이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우 관련 인력 공급 부족, 인건비 등 비용 상승, 산업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있는 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부가가치의 경공업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소, 대학 등과의 교류도 적을 수밖에 없어 첨단 기술지식의 흡수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소재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흡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3. 사례 지역 비교에 의한 낙후발생 원인

제3장에서는 제조업이 경남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함안군과, 충북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인 영동군의 사례 조사를 하였다. 이 분석에서 도출되는 낙후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1. 도시와의 인접성

함안군의 경우 제조업이 매우 발전된 창원, 마산, 진주 등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 기업들은 지가가 비싼 도시지역 내에 입지하기보다는 함안에서 생산하며 도시지역 근로자를 활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 지역의 지방산단 분양가가 평당 60만원 선으로, 인근의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다른 지역, 예컨대 영동군의 14만원에 비해서는 매우 비싼 편이다. 결국 다른 여건이 좋다면, 기업 입지시 용지가격 수준은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동군은 대전광역시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영동군 자체 내 특화산업이 없고, 대전시와의 네트워크도 부족해 상호 시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구 중심의 도시이지만, 대전시의 주력 산업이 견고하지 못하여 영동군으로 spill-over되거나 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등 충북 중부권지역은 IT와 BT의 중심지로 주력 산업이 확고하지만, 이미 오창, 오송 등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영동 지역까지는 spill-over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영동군에는 이 두 가지 산업이 많지 않아 이런 업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영동군의 식품산업에도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동군은 대전이나 청주와 결절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대도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1.3.2. 부존자원의 활용

제조업발전에 있어 부존자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영동군

의 경우 확실한 부존자원인 일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다. 영동군에 풍부하게 부존된 일라이트가 널리 연구·홍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화도 부진하여 기능성 침대 등에서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일라이트가 영동군의 주력 부존자원으로 제품생산에 본격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 등에 관한 심층 연구와 함께, 다양한 기능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함안군에는 이렇다 할 독자 부존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주변 대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도시 제조업의 대안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농산물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동군은 포도, 함안군은 수박, 파프리카 등을 주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함안군의 경우 수박은 내수중심, 파프리카는 수출농단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나, 가공제품 생산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영동군은 영동대학교를 중심으로 포도즙 제품화에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주)와인코리아에 지분참여 형태로 포도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포도주에는 참여한 기간이 짧고, 포도즙 생산규모가 적은 편이다.

1.3.3. 확고한 전략산업의 존재

<표 2-12>에서와 같이 함안군의 기계·장비산업은 도시특화형 산업인데 반해, 영동군의 음식료품은 농촌특화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경남의 전략산업인 기계산업이 창원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함에 따라, 함안군은 확실한 주력 산업으로 기계부품업체들이 상당수 입지해 있다. 이러한 기계부품업체는 조립금속, 기계장비업뿐 아니라, 자동차 및 조선용 부품으로도 사용되어, 전후방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영동군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IT, BT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매우 적고,

상당수의 업체가 고용규모나 생산액이 적은 중소기업 중심의 음식료품 등 농산물 가공업체이다. 영동군은 포도를 중심으로 포도즙, 포도잼 등 가공산업이 활발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모 생산에 머물고 있어 지역경제 견인에는 역부족이다.

1.3.4. 지자체의 지원 정도

함안군과 영동군 모두 군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지원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 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지원정도에 따라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발전되거나 낙후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편이다.

1.4. 산업입지정책에 의한 낙후발생 원인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대도시 주변의 공단개발, 1970년대는 울산 등에 대규모 거점 공단개발, 1980년대에는 중소규모 공단의 지방 분산, 1990년대에는 권역별 특성화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산업입지정책에 의해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낙후지역이나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년 동안 300개 정도가 조성되었으나, 1개 농공단지당 약 1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입주하였고, 단지당 평균 고용규모도 350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센터설립,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함안군과 인접한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도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 대상 지역으로 많은 지원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발전이 뒤진 기초지자체 혹은 농촌지역의 지연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연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자금지원, 기술이전,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는 광역지자체별로 10개 이내의 지연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낙후지역 지원이 체계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농촌을 중심으로 한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추진하는 지연산업과 신활력지역에 대한 지원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신활력지역 내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1.5. 낙후발생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농업인 404명과 비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며, 가중치를 두지 않고 총빈도수를 구하여 백분비로 나타냈다. 도농 간 산업격차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농업인의 42.6%, 비농업인의 36.7%가 지역 내 노령인구 증대와 젊은 층의 농업기피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FTA 등으로 농업지속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우량기업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혹은 공업입지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적었다. 즉, 산업의 입지 여건은 좋으나, 제조업체가 기피하고 있고, 농업 여건은 노령화와 수입품증가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거주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인의 32.3%, 비농업인의 20.9%가 대기업 및 공단유치라고 응답하여 제조업 중심의 발전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의 유치라고 응답하여, 농촌지역은 사회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젊은 층의 정주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 도농 간 산업격차가 확대되는 이유

| | 농업인 | | 비농업인 | | 합 계 | |
|--------------------------|-----|-------|------|-------|-------|-------|
|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 지역 내 노령인구 증대와 젊은 층의 농업기피 | 342 | 42.6 | 217 | 36.7 | 559 | 40.1 |
| 지역 내 우량기업 유치가능성 희박 | 79 | 9.9 | 80 | 13.5 | 159 | 11.4 |
| 농촌지역의 공업입지조건 불리 | 54 | 6.7 | 55 | 9.3 | 109 | 7.8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육성 대책 부족 | 138 | 17.2 | 113 | 19.1 | 251 | 18.0 |
| FTA 등으로 농업지속 곤란 | 189 | 23.6 | 127 | 21.5 | 316 | 22.7 |
| 합 계 | 802 | 100.0 | 592 | 100.0 | 1,394 | 100.0 |

표 6-2.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

| | 농업인 | | 비농업인 | | 합 계 | |
|------------------------------|-----|-------|------|-------|-------|-------|
|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 대기업 및 공단유치 | 257 | 32.3 | 122 | 20.9 | 379 | 27.5 |
| 도로확충, 상하수도 정비 | 93 | 11.7 | 66 | 11.3 | 159 | 11.5 |
| 병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유치 | 177 | 22.3 | 116 | 19.9 | 293 | 21.3 |
| 공공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유치 | 179 | 22.5 | 68 | 11.7 | 247 | 17.9 |
| 농민의 전직훈련 및 취업알선 | 38 | 4.8 | 103 | 17.7 | 141 | 10.2 |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제공, 자금지원 | 51 | 6.4 | 107 | 18.4 | 158 | 11.5 |
| 합 계 | 795 | 100.0 | 583 | 100.0 | 1,378 | 100.0 |

2. 농촌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제언

2.1. 기본 방향: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은 농작물이나 농촌 내 특화자원과 농촌형 제조업을 연관시켜, 즉, 농촌의 복합산업화를 통해 농촌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 및 연구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시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농어촌 복합화란 2종 이상의 산업 부문, 즉 농수산물 원료재배를 위주로 하는 1차산업과, 이들 원료로 가공·저장에 의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등 2차산업, 이들 가공품의 판매, 유통 및 관광, 레저 등이 결합된 3차산업 등이 공존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남 보성군은 강점이 있는 녹차를 브랜드화시켜 보성녹차

표 6-3. 농촌지역에서 개발이 바람직한 비농업 부문

| | 농업인 | | 비농업인 | | 합 계 | |
|-----------------------|-------|-------|------|-------|-------|-------|
|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 대규모 제조업체공장의 유치 및 건설 | 235 | 20.2 | 128 | 16.9 | 363 | 18.9 |
| 대규모 레저단지 건설 | 99 | 8.5 | 76 | 10.1 | 175 | 9.1 |
| 식품가공업 등 중소기업 제조업체 유치 | 290 | 24.9 | 171 | 22.6 | 461 | 24.0 |
| 식품유통업 등 중소기업 서비스업체 유치 | 138 | 11.8 | 124 | 16.4 | 262 | 13.6 |
| 농산물가공 등 영세규모가공업체 창업 | 265 | 22.7 | 135 | 17.9 | 400 | 20.8 |
| 관광농원 등 영세규모 관광업체의 창업 | 101 | 8.7 | 85 | 11.2 | 186 | 9.7 |
| 구멍가게 등 소매업 창업 | 37 | 3.2 | 35 | 4.6 | 72 | 3.7 |
| 합 계 | 1,165 | 100.0 | 756 | 100.0 | 1,921 | 100.0 |

를 수출하면서, 녹차막걸리, 녹차김치 등 농산물을 결합하여 제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해수녹차사우나, 녹차축제(보성다향제), 녹차농원 관람 등을 통해 레저와 관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앞선 실태 조사 결과, 농촌지역에서도 농업과 제조업의 공존 내지 상생을 희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농업 부문으로는 식품가공 등 중소기업 제조업체 유치가 전체의 2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농산물가공 등 영세기업체의 창업으로 20.8%를 차지하였다.

농촌지역에서 2, 3차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이런 산업들이 농업과 접목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인프라란 도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주택뿐 아니라, 외지인이 농촌지역에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표 6-4>, 농촌지역

표 6-4. 지역산업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 | 농업인 | | 비농업인 | | 합 계 | |
|----------------------|-------|-------|------|-------|-------|-------|
|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 대규모 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 165 | 14.2 | 92 | 11.4 | 257 | 13.1 |
|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 223 | 19.2 | 127 | 15.8 | 350 | 17.8 |
| 창업희망자에 대한 경영교육 | 153 | 13.1 | 123 | 15.3 | 276 | 14.0 |
| 지역 내 창업지원센터 및 단체의 설립 | 194 | 16.7 | 91 | 11.3 | 285 | 14.5 |
| 지역 주민에 대한 기술교육 | 170 | 14.6 | 162 | 20.1 | 332 | 16.9 |
| 전문기술인력의 유치 | 139 | 11.9 | 127 | 15.8 | 266 | 13.5 |
| 지역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시행 | 120 | 10.3 | 79 | 9.8 | 199 | 10.1 |
| 합 계 | 1,164 | 100.0 | 804 | 100.0 | 1,968 | 100.0 |

에서 정부의 역할은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지역 주민에 대한 기술교육 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창업지원센터 및 단체의 설립, 창업희망자에 대한 경영교육, 전문기술인력의 유치, 대규모 투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른 설문항목에 대해서도 고른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복합산업화로의 농촌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이든 비농업인이든 농촌지역 거주자 대다수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산업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역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2. 농촌 지연산업을 포괄하는 클러스터의 육성

정부는 자생력 있는 농촌지역 내 클러스터를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각 클러스터간의 시너지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도 농산물 관련 지연산업 및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기업·산업들이 입지해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중 성장 가능성이 있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 소재 클러스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의 집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 산업집적에 장애가 되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등은 기초지자체가 지연산업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왜냐하

면 농촌지역의 경우 이렇다 할 유망제조업이 집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산업 중 첨단화가 가능한 산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선정된 전략산업에서의 클러스터 구축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연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규모가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지연산업의 경우 농촌지역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선정, 기술협력, 노동력 조달, 재정 등의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의 형성에 있어 공공 부문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3. 농촌형 RIS구축

농촌지역에서 농업이 중심이 되어 복합산업화 내지는 고기술산업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체제란 지역 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생산자, 연구인력, 공공기관 등이 상호 교류 및 협력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도 농산어촌형 RIS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이 영세한 농산어촌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부인사, 출향인사, 인근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개방형 지역혁신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계획에서 제시된 농산어촌형 RIS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산업의 혁신과 2, 3차산업과의 융합이다. 즉, 농업 중심의 1차산업에 가공, 유통 등 2차·3차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고부가가

치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예: 농촌 정보화시범마을 지정 및 관련 컴퓨터교육). 셋째, 5도2촌사업으로,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서 체류하면서 관광·문화·영농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출향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넷째, 다양한 농외소득 증대로, 농업뿐 아니라 농업과 연계된 전통테마마을 육성 등을 통해 산업을 다변화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 기반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가는 농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생적인 RIS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 성주에서는 참외 특산지로, 참외 관련 기술 수준이 매우 높고, 생산-유통-마케팅-기술지원 등의 면에서 일관된 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 참외 생산자들은 참외의 맛뿐 아니라, 크기도 200g, 300g 혹은 그 이상 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고 있으며, 액체퇴비(액비)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군 차원에서 설립한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유형의 기술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성주군에는 기술교류를 위한 생산자 조직은 참외농협에만도 33개가 있고,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형성된 100여 개 조직이 있다. 청년·장년층이 참외농사에 다수 관여하고 있어 기술교류, 혁신이 활발한 편이며, 게르마늄 참외, 세라늄 참외, 맥반석 참외, 꿀벌 참외, 키토산 참외 등을 개발하고 있다. 마케팅은 직판이 대부분(90%)이지만, 인터넷 판매(10%)도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 및 고정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성주군내 참외 관련 유통망이 점차 대형화되고, 포장은 소포장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성주참외’ 브랜드가 난립되어 다른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참외 가공제품이 적어, 이런 문제의 해결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RIS는 상당 부분 농촌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농민들이 주도하고 있고, 지자체와 농협은 이를 후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농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제조업에 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규모가 너무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농업 성공 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 농업 기술 개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 등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

2.4. 농산물 가공산업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므로, 농산물을 가공한 건강식품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의 지식 기반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단순생산 판매보다 가공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공산업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향상과 환경친화적 농산물의 양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건설, 기존 가공제품 업체의 시설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업체의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공제품의 용기 관련 금형개발, 포장디자인의 개발 및 홍보비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 등의 이미지와 상품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을 농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7억원이 지원된다.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개보수는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업체당 5억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은 앞서 언급한 지연산업의 성장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상의 두 가지 지원제도가 일정 기간에만 지원되고 있어, 상시적인 지원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5. 농산물 관련 기업, 단체 등 저변 확대

농업 종사자가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산물 관련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농촌의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이처럼 지역산업간 연계가 성공하여 홍보될 경우, 3차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농업종합자금제’를 통해 농업경영체¹⁶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과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시설·개보수·운영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동 제도는 사업계획의 수립 능력이 취약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영체에 대한 지도기관의 자문, 상담을 수행한다. 또한 능력 있는 경영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화를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다.

둘째, ‘농업경영 회생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는 건설한 농업경영체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 충격으로 일시 경영위기에 직면한 경우,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

¹⁶ 상법상의 농기업뿐 아니라 농업 관련 단체, 법인, 농민 등 농산물을 통해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를 통칭함.

범적으로 도입되었다. 평가 결과 회생 가능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저리로 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되며, 회생 불능 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농촌에서도 농산물 등의 전자상거래의 확대가 필요하다. 농림부는 새로운 유통경로로 급부상하고 있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총규모가 30억원이며, 연 5%의 금리에, 용자기간 2년, 업체별 지원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어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2.6. 벤처농업의 효율적 육성

벤처농업이란 농산물에 기능성을 도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쌀에 다른 식품추출물을 결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기능성 쌀을 생산하거나 동충하초를 약제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식품 관련 바이오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분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비록 경지규모가 협소하지만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술농업을 추구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농업선진국은 신기술과 결합된 과학영농으로 농업이 가지는 무한한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전체 수출 중 농산물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벤처농업 육성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농업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영 성과 측면에서는 다른 벤처기업에 못지않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자금 조달 측면에서 농업 관련 벤처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벤처농업의 육성전략은 반드시 장기적이고 종합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 실행되어야 한다. 농업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설립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도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면 농업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면 창업, 조세, 기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창업인 경우 중소·벤처창업지원기금¹⁷이나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¹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는 6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2년간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면제, 5년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50% 감면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벤처농업 발전의 일천함을 극복하고 벤처농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벤처농업연구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래식 영농기법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농업 벤처에 대한 낮은 인지도, 낮은 성공 가능성은 지식 기반 농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¹⁷ 업체당 10억원 한도, 연 5.9% 이자율, 상환기간 5-8년.

¹⁸ 대출한도 5억원, 연 4.9% 이자율, 상환기간 5년.

다. 벤처농업연구센터에서는 첨단농업, 농산물가공, 생물자원, 관광 등 유망 벤처농업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첨단농업 및 청정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2.7. 기술과 연계된 산업발전 추진과 기술인력 양성

농촌 소재 기존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결합,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하거나, 기존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고부가가치화하는 경우 전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여러 농업 관련 서비스기관을 통해 농촌소재 기업의 발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⁹ 영국 잉글랜드의 South West지방에서는 농촌기업 상공회의소²⁰를 통해 농촌소재 기업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농업이나 식품산업 분야에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이런 기관을 통해 농촌기반 기업의 설립 시 자금지원을 하거나, 지식의 이전, 훈련 및 숙련도 향상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 말에 이 지역 농촌소재 기업들은 지식교류센터(Knowledge Exchange Centre)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석회석산지인 단양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산업발전 정체에 따라, 부존자원인 석회석 중심의 산업구조를 석회석 신소재산업으

¹⁹ South West of England RDA, *Making a Difference*, May 2004.

²⁰ The South West Chamber of Rural Enterprise(CoRE).

로 육성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회석을 활용한 정밀화학, 전기전자 관련 세라믹, 고급제지, 의학용 부분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 및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동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천의 대원과학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소와 공동 연구뿐 아니라, 생산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고급 인력 공급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촌주변 지역 내 대학, 기존 연구소, 지원기관 등을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농촌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됨에 따라, 농촌지역 소재 기업들의 경우 고급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적기에 필요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내 몇 개 기초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이들 소권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기업 내 연구인력, 대학의 교수진 등을 교육요원으로 하여, 농촌지역 산업현장에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설립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현저히 뒤지는 농촌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인력수급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안정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역노동시장을 효율화하고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8. 1사1촌 결연 등의 활성화

농업시장 개방 압력 속에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근 전경연 등을 중심으로 1社1村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²¹. 이것은 한마을이 한 회사와 결연을 맺음으로써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 및 경제적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2004년 내에 1,000여 개 기업이 1사1촌 운동을 통해 농촌과 자매결연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뿐 아니라 사회단체, 아파트단지, 정부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1사1촌 운동은 도시가 농촌을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운동이 아니라, 도농이 상생하는 운동이다.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는 기존의 5도 2촌 운동과 같이, 도시민은 양질의 농산물과 문화·관광·휴양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 전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기업과 농촌의 교류를 넓혀 기업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고,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사1촌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전제품 수리 및 마을 공동 시설물 설치, 마을회관 보수 및 수리 등 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지원, ② 자매결연 마을과의 계약재배 및 지역 특산품 구입, ③ 회사내 구내식당용 쌀 및 부식 구입, ④ 판촉 활동 혹은 임직원 선물지급 시 농산물 상품권 구입 등이다.

²¹ 문화일보, 2004. 6. 9.

이러한 1사 1촌 운동은 농촌소득 증대와 도시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해 나갈지에 관해서 상호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

2.9. 농공단지의 활성화

농공단지는 조성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소재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있다.

농공단지의 분양가는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분양가의 1/3 이하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의 부족, 주변 생활 여건 등 입지 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 또한 농공단지 내에는 영세업체들이 많아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휴폐업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농공단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분양가뿐 아니라, 기반시설 면에서 부족한 점의 보완 및 자연산업과 연계된 관련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농공단지의 조성실적이 미미한 편이고, 개발된 농공단지의 개수가 300개에 가까워, 농공단지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농공단지가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농공단지의 신규조성은 수적인 면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단지의 내실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완제품, 단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

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입주기업들은 주변 산업단지 등과 연계, 관련 업종을 계열화함으로써 전문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농공단지가 농촌지역에 입주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의 가공·보관·유통 등의 기능과 연계를 통해 단지 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부 표

부표 1. 시 지역 인구변화

단위: 명

|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7대 도시 | 21,541,020 | 22,323,556 | 22,380,783 | 22,501,108 | 22,482,685 | 22,440,150 |
| 경기도 | 6,224,497 | 7,840,911 | 8,080,565 | 8,329,968 | 8,967,424 | 9,338,592 |
| 강원도 | 1,029,515 | 1,070,019 | 1,081,089 | 1,087,228 | 1,087,115 | 1,084,856 |
| 충북도 | 878,031 | 924,193 | 935,990 | 946,116 | 952,721 | 959,152 |
| 충남도 | 895,030 | 1,119,615 | 1,136,426 | 1,152,120 | 1,159,690 | 1,163,884 |
| 전북도 | 1,562,414 | 1,592,091 | 1,599,728 | 1,603,794 | 1,604,791 | 1,577,107 |
| 전남도 | 999,284 | 1,092,977 | 1,089,161 | 1,086,149 | 1,081,294 | 1,072,322 |
| 경북도 | 2,096,537 | 2,154,982 | 2,163,362 | 2,156,016 | 2,153,231 | 2,134,894 |
| 경남도 | 3,156,241 | 2,468,853 | 2,492,499 | 2,520,945 | 2,543,062 | 2,577,439 |
| 제주도 | 85,393 | 355,465 | 359,787 | 364,106 | 369,627 | 374,475 |
| 전국합 | 38,467,962 | 40,942,662 | 41,319,390 | 41,747,550 | 42,401,640 | 42,722,871 |

부표 2. 군 지역 인구변화

단위: 명

|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7대 도시 | 276,107 | 450,790 | 460,037 | 474,474 | 483,441 | 483,124 |
| 경기도 | 1,564,927 | 831,721 | 853,767 | 889,375 | 577,072 | 588,881 |
| 강원도 | 498,973 | 482,648 | 475,890 | 467,460 | 465,292 | 453,864 |
| 충북도 | 561,315 | 560,273 | 556,087 | 551,397 | 543,799 | 533,561 |
| 충남도 | 957,331 | 793,813 | 782,904 | 769,484 | 758,447 | 743,841 |
| 전북도 | 444,188 | 417,159 | 409,779 | 395,461 | 401,663 | 376,739 |
| 전남도 | 1,186,280 | 1,078,047 | 1,065,932 | 1,044,465 | 1,018,014 | 981,882 |
| 경북도 | 673,841 | 654,613 | 645,205 | 641,162 | 631,473 | 621,850 |
| 경남도 | 793,662 | 600,902 | 587,730 | 573,468 | 563,440 | 546,979 |
| 제주도 | 178,196 | 178,543 | 178,957 | 178,262 | 177,262 | 176,356 |
| 전국합 | 7,134,820 | 6,048,509 | 6,016,288 | 5,985,008 | 5,619,903 | 5,507,077 |

부표 3. 시 지역 면적변화

단위: km²

|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7대 도시 | 3,000 | 3,325 | 3,331 | 3,339 | 3,356 | 3,363 |
| 경기도 | 3,152 | 6,028 | 6,027 | 6,028 | 6,030 | 6,020 |
| 강원도 | 4,797 | 4,798 | 4,799 | 4,799 | 4,799 | 4,798 |
| 충북도 | 2,019 | 2,020 | 2,019 | 2,020 | 2,020 | 2,020 |
| 충남도 | 3,421 | 4,042 | 4,042 | 4,042 | 4,042 | 4,043 |
| 전북도 | 3,091 | 3,080 | 3,081 | 3,082 | 3,082 | 3,082 |
| 전남도 | 2,152 | 2,501 | 2,501 | 2,502 | 2,503 | 2,504 |
| 경북도 | 9,762 | 9,763 | 9,763 | 9,764 | 9,764 | 9,765 |
| 경남도 | 4,794 | 4,224 | 4,224 | 4,226 | 4,227 | 4,228 |
| 제주도 | 255 | 510 | 510 | 510 | 510 | 510 |
| 전국합 | 36,442 | 40,291 | 40,298 | 40,311 | 40,333 | 40,332 |

부표 4. 군 지역 면적변화

단위: km²

|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7대 도시 | 1,218 | 1,973 | 1,974 | 1,974 | 1,975 | 1,975 |
| 경기도 | 6,963 | 4,108 | 4,108 | 4,107 | 4,107 | 4,108 |
| 강원도 | 11,738 | 11,764 | 11,764 | 11,773 | 11,814 | 11,814 |
| 충북도 | 5,414 | 5,413 | 5,413 | 5,412 | 5,412 | 5,412 |
| 충남도 | 5,126 | 4,543 | 4,544 | 4,545 | 4,555 | 4,555 |
| 전북도 | 4,967 | 4,968 | 4,968 | 4,968 | 4,969 | 4,969 |
| 전남도 | 9,759 | 9,463 | 9,481 | 9,485 | 9,487 | 9,533 |
| 경북도 | 9,260 | 9,260 | 9,260 | 9,259 | 9,260 | 9,260 |
| 경남도 | 6,773 | 6,289 | 6,289 | 6,289 | 6,290 | 6,290 |
| 제주도 | 1,336 | 1,336 | 1,336 | 1,336 | 1,337 | 1,337 |
| 전국합 | 62,553 | 59,117 | 59,137 | 59,149 | 59,205 | 59,253 |

부표 5. 시 지역 인구밀도 변화

단위: 명/km²

|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7대 도시 | 7,181 | 6,713 | 6,719 | 6,739 | 6,699 | 6,673 |
| 경기 | 1,975 | 1,301 | 1,341 | 1,382 | 1,487 | 1,551 |
| 강원 | 215 | 223 | 225 | 227 | 227 | 226 |
| 충북 | 435 | 458 | 463 | 468 | 472 | 475 |
| 충남 | 262 | 277 | 281 | 285 | 287 | 288 |
| 전북 | 505 | 517 | 519 | 520 | 521 | 512 |
| 전남 | 464 | 437 | 435 | 434 | 432 | 428 |
| 경북 | 215 | 221 | 222 | 221 | 221 | 219 |
| 경남 | 658 | 584 | 590 | 597 | 602 | 610 |
| 제주 | 335 | 697 | 706 | 714 | 725 | 734 |
| 전국 | 1,056 | 1,016 | 1,025 | 1,036 | 1,051 | 1,059 |

부표 6. 군 지역 인구밀도 변화

단위: 명/km²

|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7대 도시 | 227 | 228 | 233 | 240 | 245 | 245 |
| 경기 | 225 | 202 | 208 | 217 | 140 | 143 |
| 강원 | 43 | 41 | 40 | 40 | 39 | 38 |
| 충북 | 104 | 104 | 103 | 102 | 100 | 99 |
| 충남 | 187 | 175 | 172 | 169 | 167 | 163 |
| 전북 | 89 | 84 | 82 | 80 | 81 | 76 |
| 전남 | 122 | 114 | 112 | 110 | 107 | 103 |
| 경북 | 73 | 71 | 70 | 69 | 68 | 67 |
| 경남 | 117 | 96 | 93 | 91 | 90 | 87 |
| 제주 | 133 | 134 | 134 | 133 | 133 | 132 |
| 전국 | 114 | 102 | 102 | 101 | 95 | 93 |

부표 7. 시 지역 제조업 현황, 2002

단위: 백만원, m²

| 산업분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건물연면적 |
|--------------|--------|-----------|-------------|-------------|-------------|-------------|
| 음식료품 | 4,820 | 130,143 | 32,725,249 | 13,125,085 | 24,853,228 | 10,924,019 |
| 섬유제품 | 7,407 | 158,664 | 20,363,921 | 7,842,703 | 23,443,533 | 13,472,592 |
| 봉제의복, 모피제품 | 9,450 | 143,844 | 12,230,733 | 5,299,912 | 2,018,812 | 3,041,976 |
| 가죽, 가방 및 신발 | 2,345 | 40,315 | 5,109,448 | 1,827,087 | 1,928,402 | 1,521,222 |
| 목재, 나무제품 | 1,746 | 23,378 | 3,271,031 | 1,155,268 | 6,538,451 | 1,812,055 |
| 펄프, 종이제품 | 2,474 | 47,352 | 10,293,070 | 3,826,095 | 10,252,894 | 5,098,039 |
| 출판, 인쇄 | 5,664 | 98,390 | 12,018,634 | 6,847,237 | 3,475,022 | 2,944,536 |
| 코크스, 석유정제품 | 91 | 5,814 | 23,329,499 | 3,551,553 | 12,425,765 | 1,257,034 |
| 화합물, 화학제품 | 2,840 | 115,140 | 54,230,152 | 21,262,365 | 55,544,596 | 15,090,884 |
| 고무, 플라스틱제품 | 6,871 | 147,414 | 21,412,602 | 8,539,126 | 18,859,928 | 9,630,604 |
| 비금속광물제품 | 2,541 | 58,155 | 14,297,538 | 6,646,080 | 31,691,306 | 7,406,209 |
| 제1차금속 | 2,177 | 88,671 | 41,884,490 | 13,338,291 | 46,958,321 | 15,445,483 |
| 조립금속제품 | 11,600 | 177,535 | 20,812,755 | 8,652,834 | 26,553,155 | 10,888,518 |
| 기계, 장비 | 13,390 | 266,777 | 46,206,497 | 17,958,261 | 37,072,120 | 16,480,211 |
| 컴퓨터, 사무용기기 | 743 | 38,924 | 22,427,184 | 6,609,683 | 3,079,487 | 2,213,654 |
| 전기기계 | 5,356 | 129,833 | 21,555,841 | 7,626,399 | 11,800,918 | 6,539,311 |
| 영상, 음향, 통신장비 | 4,453 | 261,838 | 83,191,751 | 36,553,068 | 20,288,069 | 12,895,479 |
| 의료, 정밀기기 | 2,566 | 42,823 | 4,651,380 | 2,089,919 | 2,253,057 | 1,638,937 |
| 자동차 | 3,094 | 182,151 | 62,786,805 | 23,517,413 | 31,500,667 | 13,986,916 |
| 운송장비 | 1,023 | 89,384 | 22,342,100 | 8,728,623 | 24,271,677 | 6,133,744 |
| 가구 | 5,390 | 78,028 | 8,643,639 | 3,397,557 | 8,188,229 | 4,991,149 |
| 재생용 가공원료 | 352 | 3,762 | 735,538 | 232,030 | 1,384,962 | 269,833 |
| 시 합계 | 96,406 | 2,328,335 | 544,519,857 | 208,626,589 | 404,382,599 | 163,682,405 |

부표 8. 군 지역 제조업 현황, 2002

단위: 백만원, m²

| 산업분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부가가치 | 부지면적 | 건물연면적 |
|--------------|--------|---------|------------|------------|-------------|------------|
| 음식료품 | 2,730 | 52,211 | 10,126,647 | 3,587,315 | 17,589,285 | 4,741,897 |
| 섬유제품 | 2,321 | 41,214 | 4,361,832 | 1,808,622 | 8,304,015 | 3,890,223 |
| 봉제의복, 모피제품 | 59 | 1,252 | 88,999 | 37,435 | 380,531 | 228,316 |
| 가죽, 가방 및 신발 | 144 | 1,893 | 367,227 | 93,463 | 381,024 | 146,811 |
| 목재, 나무제품 | 343 | 3,147 | 326,168 | 138,849 | 1,382,805 | 306,313 |
| 펄프, 종이제품 | 439 | 10,209 | 2,989,502 | 1,160,120 | 4,476,472 | 1,644,718 |
| 출판, 인쇄 | 108 | 1,221 | 174,107 | 97,850 | 395,533 | 91,213 |
| 코크스, 석유정제품 | 18 | 1,900 | 7,179,642 | 762,723 | 2,820,194 | 149,171 |
| 화합물, 화학제품 | 780 | 19,957 | 5,972,957 | 2,412,555 | 9,729,746 | 2,672,522 |
| 고무, 플라스틱제품 | 1,165 | 28,600 | 5,750,375 | 2,318,360 | 8,276,513 | 2,704,091 |
| 비금속광물제품 | 1,359 | 27,750 | 6,170,325 | 3,023,519 | 21,511,819 | 3,661,063 |
| 제1차금속 | 301 | 13,478 | 6,931,243 | 2,230,651 | 9,007,032 | 2,706,614 |
| 조립금속제품 | 1,074 | 20,637 | 2,753,378 | 1,104,219 | 7,190,790 | 2,091,725 |
| 기계, 장비 | 974 | 21,816 | 3,200,431 | 1,316,307 | 6,732,095 | 1,830,440 |
| 컴퓨터, 사무용기기 | 27 | 433 | 36,730 | 15,042 | 54,206 | 21,173 |
| 전기기계 | 413 | 13,172 | 2,504,532 | 840,794 | 2,412,618 | 872,864 |
| 영상, 음향, 통신장비 | 269 | 21,178 | 5,937,759 | 3,422,096 | 3,754,657 | 1,073,758 |
| 의료, 정밀기기 | 113 | 3,066 | 565,457 | 276,056 | 481,349 | 136,994 |
| 자동차 | 440 | 22,793 | 5,320,999 | 2,003,931 | 4,582,893 | 1,703,888 |
| 운송장비 | 182 | 10,715 | 1,617,687 | 644,417 | 4,184,613 | 1,053,132 |
| 가구 | 608 | 8,802 | 938,655 | 420,373 | 2,004,920 | 804,154 |
| 재생용 가공원료 | 82 | 611 | 75,441 | 28,816 | 220,296 | 45,312 |
| 군 합계 | 13,950 | 326,055 | 73,390,093 | 27,743,513 | 115,873,406 | 32,576,392 |

참 고 문 헌

- 고영구 등. 2002. 『농공단지사업의 성과요인과 지역경제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대전광역시 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2004.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기획예산처. 2004. 『균형발전특별회계홍보.pdf』.
- 김기환, 김정홍 등. 2003. 『충북 산업발전 비전 21』. 산업연구원.
- 김정홍. 2002. “우리나라 지역데이터에 의한 Verdoorn의 법칙 추정.” 『산업조직연구』 10(4). 한국산업조직학회.
- 김정홍 등. 2004. 『단양군 석회석 신소재산업 발전비전 21』. 산업연구원.
- 농림부. 2003. 『시도별 업체별 농산물가공 현황』.
- 영동군. 2003. 『영동군 통계연보』.
- 영동군. 2002. 『군정백서 2000-2001』.
- 최경환. 2002.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광공업통계 DB 및 사업체 기초통계 DB』.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농촌지역 2·3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2003 한국산업단지총람』.
- 함안군. 1997. 『함안군장기종합개발계획 1997-2016』.
- 함안군. 2003. 『함안군 통계연보』.
- 함안군. 2003. 『군정백서 2001-2002』.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2004. 『함안 농업발전계획(안)』.
- Amable, B. 1994. “Endogenous Growth Theory,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The Economics of Growth and Technical Change*. ed. by Silverberg, G. and L. Soete, Edward Elgar.
- Asheim, B.T., A. Isaksen, C. Nauwelaers and F. Tödtling(b). 2003. *Regional*

Innovation Policy for Small-Medium Enterprises. Edward Elgar.

Caniëls, M.C.J. 1996. *Regional Differences in Technology: Theory and Empirics*. MERIT.

Cooke, P., P. Boekholt and F. Tödting. 2000. *The Governance of Innovation in Europe*. Pinter.

Mohannak, K. and T. Turpin. 2002. "Contemporary perspectives and debates." in *Innovation, Technology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by Turpin, T. et al. (ed.). Edward Elgar.

South West of England RDA. 2004. *Making a Difference*.

연구보고 R490-3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 ③

산업활동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농촌지역 산업활성화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대광인쇄

전화 02-468-9430 E-mail:tprint@hanmail.net

ISBN 89-89225-83-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